

2025년 하반기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학술대회

일본군'위안부'연구의 궤적과 전망

2025.08.22.(금)

13:00~17:00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주최·주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세부 프로그램

구분		주제	발표
개회	13:00 -13:10	개회사 및 축사	
1부	13:10 -14:30	<세션 1> 일본군'위안부'연구 회고 사회: 강성현(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군'위안부'연구의 궤적과 전망	송연옥 (아오야마 가쿠인대학교)
		서브알턴(Subaltern)의 강력한 목소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양현아 (서울대학교)
		토론: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임경화(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휴식			
2부	14:45 -17:00	<세션 2> 일본군'위안부'연구의 궤적들 사회: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실상의 규명인가 책임의 입증인가: 일본군'위안부' 역사 연구의 두 방향	이아리 (서울대학교)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계보학: 사회학의 지평	김명희·박재홍 (경상국립대학교)
		재현, 비재현 너머: 일본군'위안부' 문학을 중심으로	장수희 (동아대학교)
		토론: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추주희(전북대학교), 장소정(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폐회	17:00	폐회사	

일본군'위안부'연구의 궤적과 전망

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주최·주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문의
jmssrnetwork@gmail.com

목차

세션 1 일본군‘위안부’연구 회고

사 회 : 강성현(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발표1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군‘위안부’연구의 궤적과 전망 3

: 여성주의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송연옥(아오야마 가쿠인대학교)

발표2 서브알턴(Subaltern)의 강력한 목소리 16

: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양현아(서울대학교)

토론 :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 임경화(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세션 2 일본군‘위안부’연구의 궤적들

사 회 :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발표3 경실상의 규명인가 책임의 입증인가 40

: 일본군‘위안부’역사 연구의 두 방향

이아리(서울대학교)

발표4 일본군‘위안부’연구의 계보학 : 사회학의 지평 54

김명희·박재홍(경상국립대학교)

발표5 재현, 비재현 너머 : 일본군‘위안부’문학을 중심으로 73

장수희(동아대학교)

토론 :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추주희(전북대학교), 장소정(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일본군'위안부'연구 회고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군'위안부'연구의 궤적과 전망
: 여성주의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송연옥(아오야마 가쿠인대학교)

서브알턴(Subaltern)의 강력한 목소리
: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양현아(서울대학교)

일본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궤적과 전망 : 여성주의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¹⁾

송연옥(아오야마 가쿠인대학교)

2025년 8월 22일

머리말

일본에서 중국 산서성의 성폭력피해자를 꾸준히 후원해온 ‘山西省·明らかにする会’²⁾는 피해자들을 ‘위안부’라고 호칭한 적이 없다. 피해자들 스스로가 ‘위안부’로 호칭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었다.

90년대에 중국에 들어온 ‘慰安婦’란 말에 피해자들은 강간은 위안이 아니라고 이 낱선 말에 반발했다. 실제로 여성들의 피해실태는 침략전쟁 하의 강간이나 병사들의 만든 임시 강간소에서의 피해가 대부분이며 세간에서 알려진 위안소에서의 피해와 달랐다. 그래서 ‘山西省·明らかにする会’에서도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위안부’란 말을 안 써왔으나 이런 입장은 ‘위안부’시민운동단체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었다.

이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시다 요네코(石田米子)는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가 편집한 “중군위안부자료집”(1992년)에서도 ‘위안부’란 말보다 작부나 예기, 혹은 특종부인 같은 용어가 훨씬 많은데 이런 언어의 혼동성을 정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에서는 성폭력 피해는 남경에서 벌어진 도시점령시의 대량강간, 전투 중에 일상적으로 벌어진 강간, 포로에 대한 성고문, 현지처로서의 여성 가두기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현재의 ‘위안부’정의나 논의에서 누락되는 존재는 중국의 이런 피해자뿐만이 아니다. 박정애가 쓴 “함께 쓰는 역사 일본군‘위안부’”에서도 명예회복이 안 된 피해자를 만나게 된다. 대부분의 한국인 ‘위안부’피해자와 비슷한 정황에서 끌려갔으나 피해자의 종착점이 대만의 유곽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³⁾

1) 이 글에서는 ~씨, ~교수, ~님과 같은 모든 경칭을 생략한다.

2) 단체의 정식 명칭은 ‘山西省에 있어서의 日本軍의 性暴力을 실태를 규명하고 大娘들과 동행하는 모임’, 공동대표로 이시다 요네코(石田米子), 이케다 에리코(池田恵理子)

이렇듯 일본의 성폭력은 위안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다양한 성폭력이 존재한 유동적이면서 복잡한 구조에 있었으며 또 이미 지적된 바이지만 피해자는 여성만이 아니었다는 점도 이제는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⁴⁾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조선인 B·C급 전범과 더불어 일본제국주의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30여년 동안 어디까지 제국의 본질을 파헤칠 수 있었는지 역사학 연구를 중심으로 검증할 시기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일본에서 논의되어있는 부부동성, 혹은 부부별성 문제하고도 뿌리가 같은 문제인데 그런 인식은 일본 사회에서 공유되어있지 않다.⁵⁾

일본에서 '위안부'문제에 관한 연구는 '위안부'제도와 일본군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데 집중되어 있으나 이제는 그 논의 자체도 교착(膠着)된 감이 있다. 피해자의 증언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자료의 새로운 발견만이 아닐 것이다.

1. 일본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궤적

1) 전사 : '위안부'문제가 부상한 1970년대

일본은 1968년에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이 무렵에 미국의 제2파 페미니즘이 들어와서 Women's Liberation, 소위 women's lib 운동이 시작되었다. women's lib를 구성한 여성들은 메이지(明治)시대(1868-1912)에 확립된 근대가족 이데올로기의 억압성을 비판하고 제도상의 남녀 차별과 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가부장 문화를 바꾸려고 했다. women's lib 운동의 시발점에서부터 견인 역할을 한 단체에 '侵略=差別과 싸우는 아시아부인회의'가 있었다. 이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여성지배와 여성해방투쟁'이란 심포지움을 개최하거나 '優生保護法'개악 반대투쟁, 기생관광 반대운동 등을 하면서 가해자로서의 일본 여성의 책임도 묻게 되었다.

1973년에 기독교 여성들과 women's lib 멤버들이 힘을 합쳐서 '기생관광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모임'을 결성하고 한국 여성들과도 연대했다. 일본 페미니스트들은 이 운동을 통해서 섹슈어리티의 정치성을 의식하게 되고 '기생관광'을 현대판 '위안부'로 해석했다. 그 멤버의 한사람인 마츠이 야요리(松井やより, 1934-2002)에 의하면 이 때에

3) 동북아역사재단, 2020년, 64쪽.

4) 上野友也2023「戦場のLGBT 戦時性暴力の被害と国連安全保障理事会における対立(전장의 LGBT 전시성폭력 피해와 UN안전보장이사회에 있어서의 대립)」『平和研究』59卷.

5) 2025년 7월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어서 28년 만에 심의가 되었다. 일본에선 패전(1945년) 후에 이에제도(家制度)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부부동성은 이에제도를 남기는 것이라는 헌법학자의 비판도 있었으나 1947년에 부부동성제도는 유지되었다. 寺原真希子변호사「夫婦同姓という人権問題」『世界』993호, 2025년 5월.

‘売春’⁶⁾이 아닌 ‘買春’이란 용어가 생겼다고 한다.

같은 무렵에 센다 가코우(千田夏光)의 “종군위안부”가 간행되었다.⁷⁾ 센다 자신은 가부장적인 심정으로 조선인 ‘위안부’를 불쌍하게 여기고 조선 여성은 ‘숫처녀’라고 강조하였다. 한편에서는 일본인 ‘위안부’는 ‘매춘부’출신이라고 구별한 데에 대해 일부 women’s lib 멤버들은 ‘매춘부’에 대한 편견이라고 항의했으나 이와 같은 이분법은 많은 사람들의 사고를 사로잡았다.

재일조선인 연구자인 김일면도 가부장적인 시각으로 ‘위안부’의 역사를 서술하고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三一書房, 1976년), “軍隊慰安婦—戦争と人間の記録”(現代史出版會, 1977년), “日本女性哀史—遊女・からゆき・慰安婦の系譜”(現代史出版, 1980년)를 차례로 간행했으나 일본 여성과 조선여성을 연속된 눈으로 보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같은 시기에 재야연구자에 의해 저변(기층)여성들을 기록한 성과가 세상에 나왔다. 야마자키 도모코(山崎朋子)의 “サンダカン八番娼館 底辺女性史序章”(筑摩書房 1972년),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의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아사히신문사, 1976년)은 해외에 인신매매된 ‘매춘부’들의 삶을 그려낸 것이다.

미국 점령하에 있던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었을 때(1972년) 오키나와에서 생존했던 배봉기(1914-1991)가 발견된 것도 같은 시기였다. 조선인 ‘위안부’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관념적인 ‘위안부’의 이미지가 현실이 된 것이었다.⁸⁾

1972년에 성립된 ‘중일국교회복’이후 1970년대는 일본의 ‘은폐’된 식민주의와 군사주의의 민낯이 대중들 앞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제성장은 제1차, 제2차 석유파동으로 주저앉게 되고 일본정부가 선언한 ‘사회복지’는 여성들의 부담에 맡기는 ‘가족복지’체제로 회귀했다. 여성 노동력의 재편성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남녀고용기회균등법(1985년에 제정, 시행은 1986년부터)과 동시에 노동자파견법이 제정됨으로써 ‘여성보호’정책은 후퇴하고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졌다. 85년은 ‘여성의 빈곤 원년(元年)’, ‘여성의 분단 원년’이란 말이 생겼듯이 일부 엘리트 여성의 등용과 대부분의 비정규직으로의 전략이란 이극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여성학, 여성사 연구자는 종전보다 증가했다고 하나 women’s lib 멤버들의 문제 관심과는 단절되고 섹슈어리티에 관한 연구도 ‘폐창운동’에 집중되고 ‘위안부’문제에 대한 관심은 후경에 물러났다.⁹⁾

6) 加納実紀代에 의하면 ‘매춘’이라는 말이 1956년에 제정된 ‘売春방지법’제정과정에서 쓰이게 된 신조어라고 한다. 80년대에 売春은 買賣春으로 바뀌고 90년대에 買賣春은 買売春으로 바뀌었다. ‘買春’란 말이 법률 용어가 된 것은 1999년에 ‘아동 買春·아동포르노 금지법’이 성립되었을 때부터이다.

7) 双葉社, 1973년. 부제는 “‘목소리 없는 여자’ 八万人의 고발”로 되어있다.

8) 1971년에 위안소에서 일했다는 시로타 스즈코(城田 すず子 1921-1993)의 자서전 “마리아의 찬가”가 日本基督教団出版局에서 나왔다.

9) 80년대의 엘리트 여성학자의 대표 주자는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1948년~)였으나 우에노 자신이 ‘시대에 편승해서 시대와 동침을 했다’고 하듯이 페미니즘의 풍속화, 상업화를 가져온 ‘근대주의자’라는 평을 받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주의를 비판적으로 연구해온 미야타 세츠코(宮田節子), 스즈키 유코(鈴木裕子), 가노 미키요 (加納實紀代), 하야카와 노리요(早川紀代)같은 연구자들은 주류 여성 학계에서 업적에 걸맞는 대우를 못 받았는데 이런 사정도 90년대에 '위안부' 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싶다. 일본 학계의 성차별과 정치적인 편견으로 '위안부'연구에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져왔다고 본다.

2. 1990년대의 '위안부'문제에 관한 연구와 역사 인식

1)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마츠이 야요리의 궤적

김학순을 비롯한 '위안부'피해자의 고발에 성실하게 응답하려고 각지에서 시민운동이 일어났고 그런 시민운동이 '종군위안부'란 말을 일본군'위안부'로, 더 나아가서 성노예란 말로 바꾸었다. 1996년 유엔에서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부속문서1)에서는 책임자처벌이란 권고가 들어있었으나 여기에 응답하려고 조직된 것이 바우넷(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일본 네트워크)이며 그 중심에 마츠이 야요리가 있었다.

1961년에 아사히신문사에 입사한 마츠이는 사내의 남녀차별과 싸우면서 공해문제를 시발점으로 아시아의 환경문제, 개발독제와 인권문제를 정력적으로 취재하였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공유화하려고 1977년에 '아시아의 여자들의 모임(アジアの女たちの会)'을 결성했다(1994년에 설립된 '아시아여성자료센터'의 전신).

1981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주재했던 마츠이는 84년에 태국에서 만난 한국인 '위안부'피해자 노수복에 관한 기사를 쓰고,¹⁰⁾ 한국의 윤정옥(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과 교류하게 되었다. 이런 관계가 나중에 '여성국제전범법정(女性國際戰犯法廷)'을 개최하는 토대가 된 것이다. 마츠이는 아사히신문사를 퇴직 후에 아시아 여성들의 인권을 테마로 1994년부터 개최한 국제회의의 경험을 살려서 2000년 12월에 도쿄에서 '여성국제전범법정(女性國際戰犯法廷)'을 개최하게 되었다.

법정의 성과로서는 무엇보다도 일본 천황 및 일본국가를 인도적 죄를 범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은 '위안부'제도의 책임을 일본군에게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국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기도 했다. 여성사 연구에 있어도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여성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연구가 환영 받았다. 예를 든다면 에도시대의 요시와라(성매매 공간)를 화려한 유흥문화로 보고 인신매매와 성 착취의 이면에는 조명되지 않았다. 이것은 폐창운동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운동가들은 헌신적으로 운동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식민지 지배의 안정에 협력한 면도 있었다.

10) “朝日新聞” 1984년11월2日.

그 이외에 일본인 '위안부' 문제가 법정에서 제기된 것을 중요시하는 의견도 있으나¹¹⁾ 실은 이 제안을 한 것은 필자였다. 2000년 법정은 마츠이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실현되었으며 가해국 여성의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속죄의식이 앞섰으나 일본의 저변 여성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 공동대표를 한 쇼지 루츠코(東海林路得子)¹²⁾도 처음에는 일본인 '위안부' 문제를 법정에서 거론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으나 필자의 설득으로 실현된 아젠다였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어디에나 기록되지 않았다.

2) 역사학 연구에서 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의 업적

일본 역사학 연구에 있어서의 '위안부' 연구는 199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으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요시미 요시아키(중앙대학 명예교수)이다.

요시미가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게 된 계기는 TV를 통해서 김학순의 커밍아웃하는 모습을 본 것이었다. 요시미는 원래는 일본군의 독가스戰을 테마로 소위 일본의 '15년전쟁'을 연구해왔으며,¹³⁾ 독가스에 관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위안부에 관련된 자료도 본 적이 있었으나 그 당시는 자료의 중대성을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요시미의 『草の根のファシズム(풀뿌리 파시즘)』(1987년)란 저서에서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에 대해 언급이 있다. '(요시다)는 징용의 악귀'가 되어 여자정신대 950명을 포함한 6천명의 조선인을 강제연행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사비로 한국 천안시에서 '사죄의 비석'을 세웠는데 (요시다의) 이런 행위는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라고 요시미는 "아시히 신문" 1983년 12월 24일 기사를 인용하면서 쓰고 있다. 이 시점에서는 위안부에 관한 요시미의 언급은 없었고 요시다 세이지의 발언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다¹⁴⁾.

태평양전쟁 피해자의 보상요구소송에서 김학순도 원고가 된 1991년 12월에 일본사회는 김학순의 등장으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사회 전체가 흥분상태에 놓였을 때 요시미는 이미 방위성 도서관에서 본 자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아사히신문사 기자에게 연락한 것이 1991년 연말이며 기자가 문서를 확인해서 신문보도한 것이 1992년 1월 11일이었다.¹⁵⁾

이 보도에 대하여 '위안부' 문제의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사관'파(역사왜곡주의자)는 1월16일에 예정된 미야자와 키이치(宮沢喜一) 수상의 한국 방문을 노린 보도라

11) 야마시타 영애(山下英愛)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 (ナショナリズムの狭間から)" 明石書店 2008년, 219쪽.

12) 1933-2015. YWCA幹事、일본기독교 부인교포회 성·인권부 담당.

13) 2004년에 『毒ガス戦と日本軍(독가스 전과 일본군)』를 岩波書店에서 간행했다.

14) 요시다 세이지는 山口県労務報国会下関支部에서 動員部長을 지냄. 나중에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의 신빙성이 문제되었을 때 요시미는 요시다의 증언을 믿을 수 없어서 채용하지 않았다고 했음(98년 논문).

15) 육군성병무국병무과 "副官ヨリ北支方面軍及中支派遣軍參謀長宛通牒案"(1938년3월4일).

고 트집을 잡았고,¹⁶⁾ 해당 자료도 업자들에게 위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일본군의 '선의의 관여'를 증명한 것이라고 우겼다.

이후 일본의 역사 왜곡주의자들의 공세는 점점 가열되어갔다. 그 대표적인 사학자인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저서 "위안부와 전장의 성(慰安婦と戦場の性)"에서 '강제연행'을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의 말은 거짓이라고 단정하고 또 '위안부'는 공창제가 허용된 시대의 '매춘부'였으니 '위안부'문제 자체가 국가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요시다 세이지는 1982년9월에 "제주도에서 젊은 여성 200명을 강제연행했다"는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발언이 '위안부'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90년대 초기에 와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타가 제주도 현지조사 후에 요시다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하자 산케이신문 같은 우파 미디어는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92년 4월부터 마침 '위안부'문제 자체가 허위인 것처럼 선전했다.

일본 우파들의 공격 표적이 된 요시미는 그들의 꾀변에 대항하려고 실증적 연구를 심화시켰다.¹⁷⁾ 요시미는 방위성 도서관에서 발견한 자료를 "종군위안부자료집"(1992년)으로 편집하고,¹⁸⁾ 이어서 1993년에 아라이 신이치(荒井 信一 1926-2017),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가와타 후미코(川田文子1943-2023), 윤명숙과 함께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1993-2025)를 설립하고 수집한 자료와 관련 연구를 소개하는 학회지"계간 전쟁책임연구"를 내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 요시미는 일반시민들이 쉽게 '위안부'문제를 이해하도록 "종군위안부"(1995년)란 신서판 책을 냈는데 중일전쟁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기의 '위안부'제도 전체를 개관하였다.

요시미가 "世界" 1997년 3월호에 쓴 '歴史資料를 어떻게 읽을까'에서는 우파들과의 논쟁점이 된 '강제성'에 대하여 위안소 안에서의 강제성, 즉 '위안부'에게 성적인 상대를 할 병사를 선택할 자유가 없었다고 대항했다. 또 '위안부'가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의 병사를 상대해야 했는데 이것은 일본 내의 공창(사실상의 성노예라는 단서를 붙였으나)과 비교해도 과혹한 처지에 놓여있으며 고객을 거부할 자유, 폐업할 자유, 외출할 자유(1933년부터 외출 허가)가 있었던 공창에 비해 '위안부'에는 모든 자유가 박탈된 '군용성노예'라고 규정지어서 '위안부'와 공창을 서열화했다.

그 다음 해에 쓴 '종군위안부'문제-연구의 도달점과 과제' ("역사평론"576호,1998년

16) 하타 이쿠히코(秦郁彦)『慰安婦と戦場の性』新潮社、1999년.

17) 전 국회의원 사쿠라우치(桜内)는 요시미의 저작물을 날조라고 평한데에 대해서 요시미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소, 2016년 1월부터 최고재판소까지 싸웠으나 피고의 책임을 면제시킴으로 요시미는 패소했다. 일본 역사학협회를 비롯한 역사학 15개 단체는 제1심 단계에서 판결을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

18) 기타 자료집으로서 1997년에 '女性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이 편집한 "政府調査'従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全5巻)"(龍鷄書舎)가 있고 스즈키 유고(鈴木裕子), 야마시타 영애(山下英愛),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편으로 "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이 2006년에 나왔다.

4월)에서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과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공창제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간 전쟁책임연구” 제38호(2002년 겨울호)에서 쓴 ‘일본군성노예(‘종군위안부’)제도 연구의 현단계’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와 과제를 총괄하였으나 특히 ‘위안부’제도와 공창제도와 이동(異同)을 정의했다. 즉 첫 번째는 국가(군)가 정책적으로 개설, 운영, 통제, 감독을 했느냐, 두 번째는 군인·군속의 전용이었느냐, 세 번째는 군 지배하에서 군법이 적용되었느냐(공창에게는 평시의 시민법이 적용되었음)로 양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했다. ‘성노예’란 말이 제목에 들어있는 것이 눈에 띄지만 요시미가 보꾸(ぼく)라는 남성용 일인칭을 쓴 면이나 공창제와 ‘위안부’제도를 같다고 보는 입장을 페미니스트 사학이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데서 필자는 이화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페미니스트 사학자’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요시미 자신은 초기의 공창제에 대한 인식(편견)을 조금씩 수정해가는 과정이 눈에 보인다.

2019년에 ‘위안부’연구를 집대성해서 “매춘하는 제국(買春する帝国)”을 간행하지만 거기서는 ‘위안부’제도와 공창제를 구분해온 정의를 공설이나 공인이냐로 바꾸었다. 타이틀에 쓰인 買春이란 말은 병사들의 성 도덕에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며 성을 관리함으로써 병사들을 통제하려던 국가의 구조적인 책임은 안 보이게 된다.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면 売春する帝国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생관광의 추진 주체를 매춘(売春)하는 군사정권이라고 해야 하듯이.

3. ‘위안부’연구에 있어서의 과제-여성주의와 탈 식민주의의 관점에서

요시미는 학자로서 일본인으로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오랜 기간 연구를 해왔으며 ‘위안부’제도가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범죄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했다. 그래서 ‘위안부’문제로 법정투쟁을 하는 시민운동가들에게는 지침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한 중국 山西省의 성폭력 피해자들, 그리고 대만의 유곽에서 생을 마감한 여성의 ‘한’은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는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요시미는 2002년에 쓴 글에서도 공창제는 평시에 시민법이 적용되고 폐창의 자유가 있는 데서 ‘위안부’제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식민지 조선에 과연 적용될 수 있을까? 서로 입장은 정반대이지만 공창제=유곽이라고 보는 것은 요시미도 하타도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닐까.¹⁹⁾

19) 김부자·김영“식민지 유곽”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일본의 대중적 호기심을 끄는 상업적인 타이틀을 달았으나 유곽과 위안소의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

여기서 1931년의 유곽 내의 창기 수를 비교한다면 일본은 52,064명에 대해 조선에서의 조선인은 1,268명, 일본인은 1,824명, 합쳐서 3,092명이며, 1942년에는 일본 내 일본 창기는 26,901명, 조선에서의 조선인 2,076명, 일본인 1,774명, 합쳐서 3,850명이다. 조선에서 조선인 창기가 조금씩 증가했으나 전체 숫자로 볼 때 조선의 유곽은 일본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것이었다. 주재하는 군대의 규모가 다른 일본과 조선에서는 유곽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달라진다. 그리고 조선 여성들은 유곽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작부, 여급, 예기 등으로 착취되고 유린당한 것이었다²⁰⁾.

요시미가 좁은 의미(狹義)에서 공창제를 논하기 위해 제시한 정의는 식민지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식민지 조선에서 평시의 시민법이 적용되었을 리가 없고 대부분의 조선인 창기가 '일자무식(一字無識)'인 것을 상기하면 폐창의 자유를 명시한 법이 있다 한들, 그것은 범죄를 감추려는 교묘한 궤변에 지나지 않다. 요시미가 말하는 '위안부'와 공창의 차이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러면 일본 국가에 있어서 공창제는 어떤 정치적인 의의를 가졌을까. 일본이 근대 공창제를 확립한 1900년에 유곽의 설치 조건을 호수 2,000호, 인구는 10,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라야 한다고 했으나 군대 소재지에는 이 제한은 없었다. 그것은 징병제가 공창제를 필수로 했기 때문이다. 공창제는 병사들에게 성적 상대를 하는 여성의 몸을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가둔 것이었으나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원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관리의 범위를 확대해서 성병검사를 예기(기생), 작부, 여급들에게까지 실시하였다.

일본이 1930년부터 1941년 사이에 13현(県)이 공창제를 폐지하고 14현이 폐창결의를 했다는데²¹⁾ 요시미는 이 사실로 공창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일본 국내의 여론의 승리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으나²²⁾ 전장터에서 '위안부'를 필요로 한 군대와 전장터로 물려간 업자들, 그리고 유곽에서 카바레 같은 새로운 유흥시설을 선호한 고객들의 취향의 변화, 이런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³⁾

근대공창제가 병사들의 성적인 통제와 성병 관리를 기축으로 한 국가의 성 관리 체계로 보지 않으면 1930년대의 공창제 쇠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²⁴⁾

20) 박정애 “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관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년.

21) 야마모토 슌이치(山本俊一)는 1926년부터 공창제가 쇠퇴했다고 본다.” 매춘과 성병의 일본근대사(売春と性病の日本近代史) 朝倉書店, 1994년.

22) “일본군 '위안부' 제도란 무엇인가(日本軍「慰安婦」制度とは何か)” 岩波ブックレット 784号, 2010년, 46쪽.

23) 일본은 1933년에 국제연맹을 탈퇴했으니 구미열강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졌다.

24) 후지메 유키 '여성사에서 본 '위안부' 문제(女性史からみた「慰安婦」問題)『季刊 戦争責任研究』18号, 1997년.

맺음말

1970년대의 '위안부'문제를 천황제와 연결시켜서 불려고 했던 일본 여성들의 문제 의식은 마츠이 야요리 같은 일부 여성들에게 계승되어서 2000년 여성법정을 실현시켰다. 그러나 법정에서 남겨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측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김윤옥(전 정대협대표)에 의하면 식민지주의, 민족차별문제에 있어서 각국의 다른 역사적경험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젠더문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로 희석시켰다는 불만을 털어놓았는데²⁵⁾ 필자가 볼 때 양측이 일본'위안부' 문제를 꺼렸듯이 한국에서는 민족주의가 아닌 식민주의에 대한 인식, 일본측은 여성주의에 한계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역사 연구에 있어서도 한계를 지적할 수가 있다. 요시미의 좁은 의미(狹義)에서 논한 공창제 정의는 식민지 조선이란 필터로 보면 벽에 부딪치고 만다. 공창도 '위안부'도 성노예였다고 하면서도 양자를 구별해야한다는 논리에서 소외되는 존재를 생산된다.

요시미의 성의와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제되는 존재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학계가 지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의 전후 역사학은 그 이전의 황국(皇國)사관의 반성에서 엄밀한 문헌실증주의에 의거하는 '과학적'역사학을 제창하였다²⁶⁾. 연구분야도 정치적인 입장은 달라도 1930년대 이후의 전쟁사를 연구하는 인재가 많다.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동학농민전쟁, 한국병합전쟁(의병투쟁)까지 연결시켜서 보는 연구가 적은 것은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은 반성해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이 애매한 것에서 연유를 찾을 수 있다.

근대국가 건설을 위하여 이미 북해도 개척 때부터 '위안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1930년대 이후의 '위안소'와 연결시키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역사수정주의적인 역사관도 역사 인식의 연속을 가로막는다.

제가 강하게 요청해서 2000년 법정 때에 일본'위안부'문제를 안건에 올리게 된 사실은 저와 고인이 된 쇼지 루츠코의 기억 속에서만 남아 있고 기록된 문서는 없다. 중요한 사건이 항상 기록에 남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국가가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남기는 '정사(正史)'이니 문서의 부재도 근대국가의 본질을 알아내는데 자료가 될 수 있다.

'위안부'논의를 '15년 전쟁'이란 짧은 시간 속에 가두어두지 말고 일본제국주의와 궤를 같이 하는 역사 연구, 여성의 성폭력에서 일본제국주의의 본질을 파헤치는 연구가 되

25) 야마시타 영애(山下英愛)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 (ナショナリズムの狭間から)” 明石書店 2008년, 239쪽.

26) 야스마루 요시오 (安丸良夫) 는 일본의 소위 전후(戰後)역사학을 비판하면서 근대화하는 일본을 밑에서 지탱한 것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쓴 폭력배들이었지만 이들의 존재나 역할은 문서 자료에 남겨지지 않다고 해서 문서 자료에 얽매이는 전후역사학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從軍慰安婦 문제와 역사가의 일 - '증언'과 '실증'을 둘러싸서” 『世界』648号, 1998년.

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 속에 나오는 공창같은 용어도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으로 해석하지 않게 일일이 정밀하게 검증을 하는 연구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문서와 증언은 '누구를 위하여 어떤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역사서술'²⁷⁾인가를 고민하고 근대가족규범을 비판하는 여성주의와 탈식민주의의 시각으로 연구해가면 패러다임 전환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27) 박정애 “함께 쓰는 역사 일본군’위안부’”116쪽.

참고문헌과 논문

- 吉見義明, 1987, 『草の根のファシズム 日本民衆の戦争体験』, 東京大学出版会。
- _____, 1995, 『従軍慰安婦』, 岩波書店。
- _____, 1996, 「従軍慰安婦」問題の解決のために, 『世界』 626号。
- _____, 1997, 「歴史資料をどう読むか」, 『世界』 632号。
- _____, 1998, 「「従軍慰安婦」問題—研究の到達点と課題」 576号。
- _____, 2002, 「日本軍性奴隷（「従軍慰安婦」）制度研究の現段階」, 『季刊戦争責任研究』。
- _____, 2010, 『日本軍「慰安婦」制度とは何か』, 岩波書店。
- 藤目ゆき, 1997, 『性の歴史学』, 不二出版。
- _____, 1997, 「女性史からみた「慰安婦」問題」, 『季刊戦争責任研究』 18号。
- 安丸良夫, 1997, 「安丸良夫氏に聞く—「慰安婦」問題と歴史学」, 『季刊戦争責任研究』 18号。
- _____, 1998, 「「従軍慰安婦」問題と歴史化家の仕事—「証言」と「実証」をめぐって」, 『世界』 648号。
- _____, 2009, 「従軍慰安婦」問題と歴史認識, 『学術の動向』。
- 秦郁彦, 1999, 『慰安婦と戦場の性』, 新潮選書（2013年で10刷）。
- 尹明淑, 2003, 『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と朝鮮人軍隊慰安婦』, 明石書店。
- 竹村民郎, 2004, 『大正文化帝国のユートピア』, 三元社。
- 上野輝将, 2005, 「ポスト構造主義」と歴史学—「従軍慰安婦」問題をめぐる上野千鶴子・吉見義明の論争を素材に」, 『日本史研究』 509号。
- 山下英愛, 『ナショナリズムの狭間から「慰安婦」問題へのもう一つの視座』, 明石書店、2008年。
- 志水紀代子・山下英愛編, 2012, 『シンポジウム記録「慰安婦」問題の開かれた議論のために』, 白澤社。
- 姜貞淑, 2016, 「韓国における日本軍「慰安婦」研究、どこまで来たのか」, 『創作と批評（日本語版）』 172号、2016年夏号。
- 洪ユン伸, 2016, 『沖縄戦場の記憶と「慰安所」』, インパクト出版会。
- 上野千鶴子・蘭信三・平井和子編, 2018, 『戦争と性暴力の比較史へ向けて』, 岩波書店。
- 金富子・金栄, 2018, 『植民地遊廓』, 吉川弘文館。
- 池田恵理子, 2019, 「「慰安婦」問題の真の解決と戦時性暴力の根絶のために」, 『立命館平和研究』 20号。
- 吉見義明, 2019, 『買春する帝国』, 岩波書店。
- 外村大, 2022, 「「和解」はなぜ困難なのか—慰安婦問題と市民運動・歴史研究」, 『東大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地域文化研究専攻』, 第27号。
- 外村大, 2022, 「娼妓等周旋業と慰安婦の要員確保—日本内地と朝鮮との比較」, 『龍谷大学経営学論集』 第61巻 第2号。
- 宋連玉, 2023, 『朝鮮「公娼制」に帝国の性政治をみる』, 有志舎。

＜ 年 次 ＞

年次	項目
1971	城田すず子『マリアの賛歌』（日本基督教団出版局）
1973	千田夏光『従軍慰安婦』ベストセラー
1975.10	『高知新聞』裴奉奇@沖縄の存在を報道
1979	山谷哲夫（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沖縄のハルモニ 証言・従軍慰安婦』無明舎
1984	松井やより、タイ在住の盧福寿を記事化
1987	川田文子『赤瓦の家－朝鮮から来た従軍慰安婦』（筑摩書房）
1991.8	金学順の証言
1991.12	韓国政府の求めに応じて、日本政府「慰安婦」問題調査
1992.1	吉見義明により防衛庁所蔵の資料発見、軍が「慰安所」設置、慰安婦募集→朝日新聞が報道
1993.4	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発足（『戦争責任研究』創刊号、同年9月）
1993.8	非自民党六党連立内閣、細川首相「かつての戦争は侵略戦争だった」 河野談話（宮沢改造内閣）
1994.8	村山首相、「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
1995	自由主義史観研究会(代表・藤岡信勝)組織
1995.7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アジア女性基金)設立
1996.2	「クマラスワミ報告」慰安婦への国家補償、加害者処罰を勧告
1997	1997年度版の中学校教科書に「慰安婦」記述(2012年度版には皆無)
1997.1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これ以降、テレビから「慰安婦」問題をテーマにした番組が姿を消す
2000.12	女性国際戦犯法廷@東京
2001.1	女性国際戦犯法廷、NHK番組改編事件(安倍議員らの政治介入)、裁判、最高裁で原告敗訴
2005.8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開館
2006. 9	第1次安倍内閣「美しい日本」「戦後レジームからの脱却」を唱える
2006.10	下村官房副長官、「河野談話」見直しを表明
2007. 3	第1次安倍内閣で「慰安婦」の強制の証拠はないと主張
2007.7	米下院本会議、「慰安婦」問題に関する対日謝罪要求決議を可決
2010	グアテマラ、ビルマの女性たちが戦時性暴力を裁く民衆裁判開廷
2011～	東京、神奈川、大阪、京都などでヘイトスピーチ（2013年に流行語大賞）
2012.12	第2次安倍内閣発足；民族主義が強まる
2013.1	『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安倍批判の社説掲載
2013.5	橋下、日本維新の会代表、「慰安婦」は軍律維持に必要だったと発言。同じ席で桜内、元衆院議員は吉見説「慰安婦＝性奴隷は捏造」と発言（～2017.6まで吉見氏は桜内を相手に名誉棄損で裁判）＊
2014.7	京都朝鮮学園に対するヘイトスピーチ、大阪高裁も「人種差別」と認定し在特会に賠償と街宣禁止の判決
2014.11	朴裕河『帝国の慰安婦』刊行
2015.11	『帝国の慰安婦』第27回アジア・太平洋賞特別賞受賞、第15回石橋湛山記念早稲田ジャーナリズム大賞受賞
2015.12	「慰安婦」問題、日韓合意
2016. 3	『帝国の慰安婦』巡り、東京大学で討論会
2017. 6	＊最高裁、吉見氏の上告を棄却
2018. 12	『戦争責任研究』91号で最終号／同会は2025年3月に解散
2021.1	『産経新聞』でラムザイヤー(ハーバード大学)論文を評価する報道

소수자들의 강력한 목소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의 목소리가 남긴 것들

양현아(서울대학교)

2025.8.22.

안녕하세요. 오늘 일본군 ‘위안부’ 연구 여정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의 논의를 저의 이야기로 통합시켜 말하는 자유를 누리볼까 합니다.

저의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연구 관심은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던 시기 김학순 피해생존자의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경 김학순의 인터뷰를 신문에 보고 MBC방송 등의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면서 충격과 분노에 온 몸이 출렁거렸지요.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말하는 김학순의 인식의 ‘벼림’에 전율하였고 일본군 성노예제의 어마어마한 참혹함에 충격을 받았고, 그럼에도 그녀들을 대하는 한국언론(과 사회)의 태도에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 ‘신에 들리듯이’ 준비 중이던 한국 가족법에 관한 박사논문을 잠시 제쳐 두고, 위안부 연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 당시 뉴욕에서 최초로 한국의 민족주의와 젠더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 개최 소식을 듣게 되어 그 조직자에게 연락하여 위안부 관련 발표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연구를 하나도 시작하지 않은 채 발표 약속부터 해 버렸으니 그야말로 심청의 아버지가 ‘공양미 삼백석’ 약속을 한 격이었지요. 1994년 여름에 있었던 이 학술대회에서 김현숙 (main organizer), 최정무, 일레인 김, 문승숙, 김승경 선생님 등 기라성 같은 분들을 만나고 뜻깊은 행사를 하였는데 이 발표문은 이후 *Positions* 와 *Dangerous Women*에 실리게 되었습니다.¹⁾

1998년 한국에 돌아와서 시간강사라는 ‘극한 직업’ 생활을 시작하였지요. 당시 한국에서는 정대협을 중심으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준비가 한창이었고 저도 선배 선생님들의 인도로 1999년 초 준비모임에 참가하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렇지만, ‘2000년 여성국제법정’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획을 긋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에 속했을 때, 아직도 제대로 증언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증언조사를 할 팀을

1) 졸고, “Revisiting the Issue of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The Question of Truth and Positionality,” *Positions - east asia cultures critiques*, 1997, vol.5-1; 졸고, “Re-memobering the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Nationalism, Sexuality, and Silencing,” *Dangerous Women - Gender and Korean Nationalism*, Elaine H. Kim & Chungmoo Choi (eds.), Routledge, 1998

끌어 모았습니다. 시간강사의 장점을 살려서 제가 나가는 강의의 대학원 학생들에게 연락과 회유를 하였고, 그들이 다시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다단계 모집으로 1999년 4월 2일 첫 모임에 30여명의 대규모의, 학제적 팀이 꾸러지게 되었지요. 우리는 스스로를 '증언팀'이라고 부르면서 2년 여의 증언연구 장정을 떠났습니다. 2021년 4월 경,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이하 '증언 4집')>(풀빛출판)가 출간될 때까지 우리팀은 증언과 구술사, 제3세계 여성주의와 주체성 이론, 트라우마와 영혼 등 참 많은 주제들을 토의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계속 제기되는 재현(representation)의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이 결과 만들어진 <증언 4집>의 방법론은 오롯이 팀원들의 공동작업의 결과입니다. 저희는 우리를 설명하는 이론은 멀리 있지 않다. 아니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래로부터의' 재현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증언의 서브알터니티(subalternity, 기층민중성, 열려있음)가 저희 방법론의 핵심이 아니었나 합니다.

또 하나, 여성국제법정에서 '남북한공동검사단'의 검사로 참여하면서 북한의 검사단과 만나서 '하나의 팀'으로 신뢰를 만들어갔던 과정은 잊을 수 없습니다. 북측의 홍선옥, 정남용, 황호남 검사 등 북한분들과 함께 작업했던 경험은 정말 벅찬 것이었어요.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이후 제가 공부하게 될 주제들을 제시했던 법정이자 시공간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지만 그 씨앗들이 본 법정에 다 들어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²⁾ 먼저,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아시아에 기반을 둔 초국가적인 공간, 즉 남한과 북한, 타이완,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동티모르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 그리고 태평양의 섬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의 사람들이 참여했던 아시아의 초국가적 공간으로서 그 차이와 공통성의 어우러짐은 세계적으로도 초유의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1990년대에 축적된 최신의 여성주의 전시 성폭력의 법리들이 아시아의 맥락에서 활용되고 변용되었던 페미니스트 법정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는 막중합니다. 이후 책임자들이 실제로 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회복을 꾀함으로써 아시아의 성폭력 법리학을 더욱 발전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셋째로 2000년 여성국제 법정은 피해자 중심의 법정의 전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법정의 원고는 '검사단과 아시아와태평양지역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핵심에는 피해생존자들의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법정이라는 연단에 올라 피해 경험을 증언하면서 전쟁 당시 최고 권력자인 히로히토 일본국왕을 소환하였던 것이지요. 피고는 히로히토를 비롯해서 이와나미 마쓰네, 도조 히데키 등 일본 국가와 군대의 책임자들이었습니다.

2) 식민지성(coloniality) 문제를 포함하여 본 법정의 여러 측면을 분석한 작업으로는, 양현아·김수아 편 <2000년 여성국제법정 - 전쟁의 아시아를 여성과 식민주의의 시각에서 불러내다>,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기획, 2021, 경인출판 참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송고한 법정을 치렀으면서도 저와 우리 한국검사단은 국제인권법과 여성주의 성폭력 법리에서 여전히 강대국과 서구 중심성이 강고하고,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대변해 줄 국제법의 논리와 사례가 매우 미진하다는 것, 그 언어의 막힘(aporia)을 체험하였습니다.³⁾ 이를 계기로 2001년 초, 국제법을 좀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침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모집한다 하여 지원함으로써 서울대 법대와 공식 인연을 맺었습니다. 2년 후인 2003년 저는 이 대학 최초 여성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이로부터 20여 년이 훌쩍 지난 요즘 저는 학교 연구실을 떠날 채비로 여념이 없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제 연구는 미미하고 답보상태인데, 그 사이 구술사, 증언, '과거 청산' 방법, 기념의 방법 등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추구했으면 하는 방향에 관한 제언을 제 연구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연구를 거처로 삼는 것은 오로서 저의 독서와 식견이 짧아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출현(증언)과 집합기억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 증언 조사에서 증언팀 방법론의 핵심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묻기에서 듣기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기존의 사회과학 면접조사의 전형과 달리 면접자가 아니라 피면접자가 주도하고 면접자는 청취하고 기록하는 위치, 혹은 함께 면접의 방향을 잡아가는 협력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푸코가 말하는 지식 생산 권력의 주도권을 화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이고, 표현해 본 경험이 희박했던 여성들의 고통의 체험을 표현하도록 힘을 주는 여성주의 구술사 접근이었으며,⁴⁾ 서브알턴 지식생산의 방법이 었다 할 수 있다.⁵⁾ 일본군 '위안부' 증언 조사연구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게다가 언어를 박탈당한 서브알턴 고령 여성들을 '말하는 주체'로 구성하려는 실천이었다. 증언은 이미 존재하는 문서 자료들을 확인해 주는 차원의 진/위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이야기와 경험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정보와 정조(affect)의 언어였다. 우리는 또한 일본군 위안소 성폭력에 국한하지 않는 생애 구술사 접근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구술 생산은 그저 수치스러워하고 눈물짓던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을 불굴의 의지 혹은 신의 가호를 받으며 혹독한 장애들을 넘어 온 생존자로 거듭나게 하였다. 그녀들은

3) 윤정옥, "머리말,"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히로히토 유죄 - 2000년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문 (이하 히로히토 유죄)>, 2007, 심영희, "2000년 법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여성과 사회>, 제12호(2001), 정진성,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배경과 의의," <여성과 사회>, 제12호, 2001, 조시현,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 김부자와 외 10인,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9 등을 참고할 것

4) 페미니스트 구술사 연구는 매우 방대하여 다 열거하기 어렵다. 한국 연구자들의 김성례, 윤택림, 이희영, 김귀옥 등 귀중한 연구들이 있다.

5) Popular Memory group, *Making Histories: Studies in History - Writing and Politics*, Univ. Minnesota Press, 1982, <증언 4집> "이 증언집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참고.

태평양 전쟁과 식민지 시기, 한국전쟁과 같은 굴곡진 시대에서 살아남은 조각난 서사를 구성하였고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 특히 이들이 기적적으로 생존했던 '모국'의 귀국 후에도 지속된 피해(차별, 멸시, 침묵, 고립, 가난, 질병 등)를 발언함으로써 이들의 피해에는 한국 정부와 한국 시민들도 일조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⁶⁾ 이러한 점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포스트식민적' 관점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며, 젠더 관점을 가진 이행기 정의론이 필요한 이유이다.

발표자는 1990년대 김학순 이래 한국에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像)을 얻은 것. 피해자에서 생존자에서 인권운동가로, 한 많은 할머니에서 자신의 이름과 개성을 가진 개인으로, 그리고 영혼을 가진 존재로 기억된 것은 매우 커다란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을 경유하지 않고는 우리들의 식민주의를 떠올리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한국의 다수 10대, 20대 여성들에게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부끄러운 타자가 아니라 자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선배(선조?) 여성이 된 것이 아닐까. 자신들의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 여성에 대한 새로운 상은 곧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 언급할 '피해자가 누구인가'와 관련됨). 집합기억의 재구성이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피해자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재정의하는 뜻깊은 과정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강력한 것이(였)다. 그것은 집합기억과 법의 판단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들의 새로운 거울이 되었다. 나아가, 식민주의 하에서도 작동하였던 일본 정부와 조선인 사회의 가부장주의, 성차별주의, 그리고 탈식민 이후 한국사회의 여성들에 대한 극심한 억압과 침묵 현상을 대면할 때, 식민지 시기 전쟁에서 저지른 일본정부가 저지른 극심한 만행과 더불어 한국 정부와 한국사회의 맹점(盲點)에 대해서도 통렬히 마주하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 인식에서 포스트식민의 맹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산은 강력하게 계속 살려가야 하는 어떤 것이다.

둘째, 일본군 성노예제에서 자행된 범죄는 다른 여러 반인권 범죄/행위의 메트릭스 속에 놓여져야 하지 않은가. 1990년대 일본군 성노예제는 UN 인권소위, ICJ(국제사법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최초로 체계적 강간, 성노예제라는 반인권 범죄로 호명되고 구성되었다.⁷⁾ 이로써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고통 받아왔던 불법행위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6) 졸고, “증언과 역사쓰기 -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과 역사> 제60집, 2001; ”증언을 통해 본 한국인 ‘군위안부’들의 포스트식민의 상흔(Trauma), <한국여성학> 제22권 1호, 2006

7) 대표적으로, Radhika Coomaraswam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4/45,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E/CN.4/1996/53/Add.1. 4 January, 1996, McDougall, Gay J.,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f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Final Report Submitted at Commission on

연구자/법률가들에게는 그 구성요건, 법적 책임, 피해자 배상 등에 관한 탐구의 길이 열렸다. 법의 보호 외곽에서 방치되었던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의 의의는 대단히 크다. 여기에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통해서 국제인권기구, 국내 공익 법률가들, 많은 활동가들과 피해자의 옹호자들(advocates)들의 역할이 크다.

이러한 변화의 국제적 맥락으로 1990년대 초 발생한 내전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각성이 있다. 이 때에 전시 성폭력은 더 이상 전시에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사고(accident)가 아니라 전쟁의 일환(weapon of the war)으로 개념되었다. 이에 따라 ICT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과 ICT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와 같은 국제형사법정에서 관련 판례들이 축적되었다. 2010년대가 되면 법학에서 ‘전시성폭력 법리학 (Wartime Sexual Violence Jurisprudence)’와 같은 분야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잠시 1994년 르완다에서 토착민 후투족이 지배층 투치족에 대한 엄청난 학살을 자행하였던 와중에서 제기된 당시 타파시 시장을 피고인으로 하는 아카예수(Akayesu) 판결의 논리를 살펴보자.⁸⁾ 처음 아카예수 기소장에는 강간 또는 다른 성적 폭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증인들의 증언과 보고서, 시민단체 등의 압력으로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었고 성폭력 혐의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재판에서 한 증인이 자신의 여섯 살짜리 딸에게 자행된 집단강간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고 여성 증언자들이 줄을 이어 자신의 강간 사실을 보고하였다. 여기서, 유일한 여성판사였던 Pillay 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필레이 판사는 젠더 폭력과 국제형사법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에 입각하여 여성들의 증언들을 조사하고 강간 사건들이 고립된 별개의 사건들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명하였다.⁹⁾ 이 결과,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방대한 성적 공격에 대한 증언들이 재판 내내 이어졌다. 수정된 기소장에서 아카예수는 성폭력을 명령하고, 교사하고, 조력하고, 선동하였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¹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카예수 법정에서는 기존의 법의 인식처럼 강간이 기계적인 신체 부위(성기)만으로 그 핵심적 요소를 포착할 수 있는 공격이 아니라는 논리를 구성하게 되었다.

고문과 마찬가지로, 강간은 사람에 대한 협박(intimidation), 강등(degradation), 모

Human Rights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E/CN.4/Sub.2./1998/13, 22 June 1998,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Comfort Women: An Unfinished Ordeal*, 1994

8) *The Prosecutor v. Akayesu* (ICTR 96-4-T), Trial Chamber Judgment(1998 September 2)를 대상으로 고찰함(이하 ‘아카예수 판결’라고 표기함). 아카예수 판결 등 ICTR과 ICTY의 새로운 전시 성폭력 논리에 관해서는 졸고,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식민지성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75호, 2021을 참고할 수 있다.

9) Alona Hagay-Frey, *Sex and Gender Crimes in the New International Law, Past, Present and Future*, Martinus Nijhoff Publisher, 2011, p.98

10) 관련내용은 아카예수 판결문, paras 729~733.

욕(humiliation), 차별, 처벌, 통제 또는 파괴를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다.¹¹⁾

아카예수 재판부는 성폭력 판단에서 i) 성폭력이 자행된 강압적, 강제적, 혹은 강요적 '상황'에 주목하였고,¹²⁾ ii) 성폭력을 집단살해 및 무력분쟁,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같은 고리들(nexus) 속에 놓음으로써 성폭력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포착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iii) 성폭력에서 피해자의 동의는 더 이상 부합성(relevance)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이에 함께, 아케예수 판결은 집단살해적 강간(genocidal rape)이라는 범죄를 구성하는 최초의 판결이 되었다.¹³⁾ 나아가 ICTY 법정에서도 전시 성폭력의 구성요건에서 기존의 폭행, 협박, 동의의 기계적 틀을 훨씬 벗어나서 전시의 폭력과 공포, 이민족(異民族)에 대한 공격의 맥락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 즉 협박을 포함하여 공포, 놀라게 함, 잘못된 정보 주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섭하면서 전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살아있는' 법리를 구성해 갔다. 피해자들을 '취약하게(vulnerable)' 만드는 상황적 요건들에 주목하는 법리는 '권리를 가진 개인'이라는 서구 법리학의 기반과는 다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아시아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한국 등의 문제 제기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the gender issue'로 크나큰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런데, 2000년 여성 국제법정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남북한 공동기소장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와 군대가 자행했던 범죄 행위는 단지 위안소에서의 체계적 강간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것은 강제 동원, 사기, 협박, 차별, 강제 국외이송, 고문, 구타, 기아, 성병을 포함한 질병의 방치, 수은주사의 지속적 투약 등 재생산적 폭력(reproductive violence), 종전 후 모국으로의 이송 불이행 등 다종의 범죄들을 포함한다.¹⁴⁾ 그럼에도 국내외에서 위안부 범죄를 '전시'에 발생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으로 다소 고립되고 고정된 범죄로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물론 여기에는 성폭력마저도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라는 안티 테제가 놓여 있지만 더 나아가 일본군 성노예제를 '전시 성폭력'으로 탈역사화하는 일본 정부와 여기에 편승한 한국 정부의 (남성중심적) 입장이 놓여있지 않을까 의심한다.¹⁵⁾ 이러한 탈맥락화는 당시 일본국이 추구했던 태평양 전쟁과 아시아공영권의 구

11) 아카예수 판결문, para. 597 & 688(필자 번역).

12) 아카예수 전심 재판부(Trial Chamber, para 688)에 따르면, 성폭력의 강제적 상황이란 물리적 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협박, 위협, 강요 등 다른 형태의 강박이 강제적 상황을 구성할 수 있고, 특히 무력갈등 내지 군사의 현존이라는 상황 자체에 강제가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13) Genocide Convention에 따르면, 집단살해란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전부나 일부를 파괴할 고의를 가지고 행한 이하의 여하한 행위로, i) 집단 구성원의 살인, ii) 집단 구성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훼손(harm)을 야기한 행위 iii) 고의적으로 집단의 삶의 조건에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물질적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예기되는 행위를 끼친 행위 iv) 집단 내에서 출산을 방지하도록 의도된 정책(measures)을 강제하는 행위 v) 어린이들을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강제로 이송하는 행위.

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히로히토 유죄>, 2007. 그런데 이 방대한 판결문 번역서에 각국가의 기소를 종합한 '공동기소장'이 실려있을 뿐 남북한 공동 기소장을 찾기는 어렵다.

축, 조선과 타이완에 대한 식민 지배, 이외 지역과 국가, 민족 등에 대한 점령 행위에 대한 맥락을 탈각시키면서 일본군 성노예제를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흐릿하게 진단해 버린다.¹⁶⁾ 이런 위안부 범죄상(像)은 피해자들을 그저 성폭력 피해자로 타자화시키면서 발언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박탈하는” 효과를 남겨 왔다. 발표자는 본 제도의 포괄적인 법리 구성을 위해서는 2000년 여성국제법정시 마련했던 남북한 공동기소장의 입체적인 인권유린을 숙지해야 한다고 본다. 덧붙여서 이 제도가 종적으로는 미군 ‘위안부’,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국의 구조화된 성매매, 제주 4.3 항쟁과 광주 민주화 항쟁,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현재까지의 반성폭력운동,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인들의 베트남 일반인들에 대한 인권유린,¹⁷⁾ 횡적으로는 식민지 시기 자행된 강제징용/징병 등의 넥서스 속에 놓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세번째, 일본군 성노예제의 식민지성을 밝히는 데에 더 매진해야 함. 한국 연구자들의 끈질긴 증언과 자료 조사를 통해서 조선인 피해자들에게는 식민지적 조건이 깊숙이 배여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10대 20대 미혼의 여성들에 대한 위안부 동원이 군인, 군속, 순사, 이장, 면장 등과 같은 공권력 집행자들에 의해 행해진 경우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2001년 수행한 192명의 한국인 전(前) 위안부 증언의 조사연구에서 볼 때,¹⁸⁾ 동원 주체들로 군인군속, 순사를 지목한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46.8%, 이장 등 말단 행정 집행자가 8.9%, 교사 2.3%로 나타나서 이들을 합하면 전체 피해자의 60% 정도를 이룬다. 여기에, 조선인 모집자(33.3%)과 일본인 모집자(18.2%)를 더하면 위안부 동원의 전체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위안부 모집의 대부분은 매춘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본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매춘업자들을 포함해서 군인군속, 순사, 이장 등과 같은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졌고 업자들과 군대간의 연결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다음, 조선인 성노예 여성들의 대다수가 원거리의 전장에 위치한 위안시설로 배치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00년 법정 재판부는 북한의 박영심 피해생존자가 중국 남경, 상해와 싱가포르를 거쳐 버마로 이동하였고 버마에서 다시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남한의 김복동도 중국 광둥에서 홍콩으로 이동하였고 3개월 만에 다시 싱가포르 주둔지로 옮

15) 같은 문제의식으로 김부자, “위안부 문제와 탈식민주의,” 나카노 도시오·김부자 편, 이해숙 역, 역사와 책임, 천인, 2008. 119-146면 참고

16) 일본군의 공격 지역마다 차이를 가졌던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법적 언설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논문으로 이 주제를 망라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싶다. Karen Knop & Annelise Riles, “Space, Time, and Historical Injustice: A Feminist Conflict-of-laws Approach to the “Comfort Women Agreement,” *Cornell Law Review*, vol.102(2017), pp.853-927

17) 한국에 창궐하는 구조적인 성매매, 베트남에서 한국군인의 인권유린과 같은 사건들은 한국사회의 남성중심성과 자민족중심주의를 가감없이 드러낸다. 이런 사건들을 거울로 삼는다면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에 그 공적 책임을 추궁해야 할 일이지 일본국을 악마화할 일은 아니다.

18) 여성부,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2001), 33-34면

겨졌다는 것을 인정했다.¹⁹⁾ 이런 이동은 피해 여성들을 성노예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그 고의성과 체계적 성격이 한층 두드러진다. 전쟁이라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이송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군 성노예제가 일본국과 일본군대의 계획과 지원, 집행을 통해 ‘한 몸처럼’ 운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조선 여성들의 피식민 주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은 일본 군인들이 자기 나라를 침략할 때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해서 조선의 피해자들은 일본군인의 전쟁 수행과 이동을 따라 아시아와 태평양의 광범위한 지역에 이송·배치된 것이다.²⁰⁾ 이렇게 전선을 따라 군대와 함께 이동하면서 자행된 ‘전시 성폭력’이란 피해자들의 완전한 종속과 노예화가 아니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실태이다.

위안소에서 장기간의 감금과 가공할 횡수의 강간에도 식민지성이 녹아있다. 조선인 여성들의 위안소에서 체류기간은 그들이 당했던 성폭력의 피해의 심대성과 성격을 또 다른 지표이다. 증언 분석을 해 보면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7%(9명), 1-3년 미만이 25.6% (49명), 3-5년 미만이 20.3%(39명), 5-7년 미만 21.9%(42명), 7-9년 미만이 9.9%(19명), 9-11년 미만이 3.6%(7명), 11년 이상이 3.6%(7명, 최고는 14년)으로 나타난다. 자기 지역에서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과 달리 조선의 피해자들은 자력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안소에서 더욱더 취약했고 장기간 일본군의 요구대로 성노예 상태로 억류당할 수밖에 없었다. 또, 종전시에 대다수 피해자들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일본군이 퇴각한 적진에서 폭격과 기아, 현지인들의 위협 등 조선에의 귀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안소에서 장기간의 감금은 성폭력의 강도와 지속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기간과 횡수 면에서 여타의 전시 성폭력과 성질을 달리 한다. 조선인 피해자들은 일본군이 설립한 ‘위안소’에서 적게는 하루 5-6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이를 체류기간에 따라 곱해 볼 때, 피강간 횡수는 여타의 체계적 강간 사건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별히 주목되어야 할 범죄 양상이다. 물론 이 말은 단기간의 강간 피해가 대다수 조선인 일본군 성노예의 피해에 비해 가볍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의 식민지성은 법의 논리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적 책임 이행, 나아가 반성이나 사죄가 적절성을 가지기 때문이고 (일본 정부는 몇 차례 ‘사과’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과/사죄의 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함), 한국인들도 이 진실을 분명히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주의와 아시아의 법정을 지향했던 2000

19) 정대협, <히로히토 유죄> 제200항.

20) 이와 같은 이송과 배치는 일본의 국내법과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을 의미한다. 앞서 본대로 국외 이송 목적의 사람의 약취, 유괴는 형법 제226조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방대한 규모의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했을 뿐 아니라 이송하고 배치했다는 것은 이런 법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대다수 피해자들은 조선의 국경을 넘었는데, 월경(越境)은 당국의 허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년 여성국제법정의 판결문조차에도 식민지성이 법리에 잘 통합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최종 판결문에는 국제법의 일반적 주체인 개별 국가가 아닌 피식민지, 점령지에 대한 국제법의 위반을 어렵사리 인정하였다. 강간과 성노예제와 같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조선이나 대만의 여성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은 “식민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나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다.²¹⁾ 2000년 여성국제법정이 이렇게 식민지 여성에게 자행된 군대 성노예제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선고한 것은 것은 매우 커다란 성과이지만, 조선과 대만 여성들이 당했던 위안부 피해와 범죄 성격을 일본인과 ‘동등성’의 논리로 구성하면 충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수용한다면 피해의 모든 측면에 조선의 피식민 여성 지위성이 원인이 되고 있기에 그 범죄의 속성에서도 이 점이 선언되었어야 한다. 조선 민족으로서의 박해, 살해 등 총체적인 전멸(annihilation)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전쟁 이후 국제평화협약이나 외교 관계에서 피식민 여성들의 피해 배상 문제는 완전히 누락되었다는 점에서도 포스트식민지 사회의 젠더문제가 존재한다. 조선의 여성들에게 자행된 성노예제는 단지 식민지인 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식민지인이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법논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²²⁾

나아가, 앞서 본 전시 성폭력 법리에서 주목되는 ‘강압적 상황’(coercive circumstances)’에 아시아의 식민지적 조건을 포함시켜야 한다. 강압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강제성’ 개념을 참고할 수 있다. 고노(河野) 담화(1992)에서는 “당시의 조선반도(한반도)는 우리나라(일본)의 통치 하에 있었고, 모집, 이송, 관리 등은 관헌 강압에 의해 대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反)해서 행해졌다”라고 하였다.²³⁾ 물론 이 고노담화조차 보수 일본정부에서 계승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강제성을 ‘의사에 반함’이라는 개인 의사를 중심으로 한 개념에 머물러 있고 한국정부는 대체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개인의 의사’ 기준으로는 식민지 피지배하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신적 강압상태를 다루기는 너무나 단편적이기 때문이다. ICTR이나 ICTY와 가티은 국제형사법정에서 제시한 피해자를 취약하게 만들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기 어렵게 만든 강압적 조건에 대한 고려는 왜 일본과 한국 정부, 그리고 법원에 오면 고려하기를 멈추는가.²⁴⁾

21) 여성국제법정 최종 판결문, 제 906, 907, 908, 911, 912, 913 항 등

22) 식민지적 법의 지배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 지형이 없지는 않다. 1980년대 이후의 포스트식민주의와 서브알턴 연구의 성과들, 2001년 남아공의 더반 선언, 남미에서의 탈권위주의적 과거 청산 운동 등에 관한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23) 참고로 김부자는 그동안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에 관해서는 ‘연행의 강제성’ 만에 한정하였고 그 강제성은 ‘협박의 강제성,’ 즉 군과 관헌에 의한 노예사냥과 같은 강제성에 한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이를 이유로 일본의 공적 책임을 부정하는 논리를 세웠다고 정리하였다. 김부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인 책임과 탈식민주의” (서울대 여성연구소 발표문, 2012.9.6).

24) 김부자, “위안부 문제와 탈식민주의,” 나카노 도시오·김부자 편, 이혜숙 역, 역사와 책임(선인, 2008).

식민지성의 미규명 문제는 조선이 피해자와 일본 군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법리적 곤경(impasse)로 나타난다. “일본 군인의 적군이 아니라면 조선 여성들은 ‘아군의’ 여성이었나” 맥두갈은 ‘체계적 강간’에 대해 정의하면서, [‘체계적 강간이란] 그 자체로도 이미 범죄가 되는 강간 행위가 “목표 집단 (targeted group)”에 대하여 “광범위한 (widespread)” 또는 “정책에 기반을 둔 (policy-based)” 대규모적 형태의 공격’이라고 하였다. 필자를 포함하여 피해 국가 연구진들은 이 ‘체계적 강간’ 개념을 널리 활용해 왔지만, 조선의 여성들이 동원되고 침탈당했던 이 체계가 일본과 조선 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할 때, 조선과 일본의 동지도 적도 아닌 관계성, ‘식민지성’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미진하게 남아있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조선의 여성들은 일본군대의 전투 수행을 위해 동원되었으며 동시에 그 집단에서 강간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후 피해와 배상을 주장함에 있어 많은 법적, 사회적 장애에 직면해 왔다. 조선(과 타이완) 여성들의 동원이 일본군 성노예제도 자체의 성립과 존속의 기반이 되었다는 데에 동의할 수 있다면, 식민지성에 대한 논리구성은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논리 구성의 핵심 과제가 아닐까 한다. 이에 발표자는 일본군 성노예를 ‘식민지성에 기초한 젠더폭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²⁵⁾ 식민지 성의 법적 문제들은 식민지 피지배를 체험한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의 법적이고 역사적인 정체성에 관한 문제여서 앞으로도 계속 자료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로, 피해자 회복(reparation)의 방법과 철학을 개발해야 함. 잘 알려진 대로, ‘유엔 피해자권리 원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회복에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된다.²⁶⁾ 본 원칙은 1980년대부터 축적되어 온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피해자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경험과 노력에 기초한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각국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원상회복 restitution), 배상(compensation), 복귀(rehabilitation), 만족(satisfaction), 재발방지 보증(guarantees of non-repetition)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²⁷⁾ 나아가,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기념, 교육, 재발방지조치 등도 피해 회복에 포함시키고 있다.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변화도 피해 회복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회복 조치에 관한 다

25) 졸고,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2021

26) UN「국제인권법 및 국제人道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회복 권리 기본 원칙에 관한 유엔총회결의(이하 유엔 피해자 권리 원칙,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f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Resolution adopted by UN General Assembly, Sixtieth Session, A/RES/60/147, March 21 2006.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에 관한 규정(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이하 ICC 절차규정) 등에서도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 권리에 관한 조치들을 찾아볼 수 있다.

27) 이에 대한 설명은 Resolution, A/RES/60/147, 19-23; 졸고, “2015년 한일 외교부 장관 합의에서 ‘위안부’는 어디에 있었나” <민주법학> 2016 참고할 수 있다.

른 참고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에 관한 규정(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이하 ICC 절차규정)은 피해자의 사법 절차 및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참여의 권리는 중심적인 것이다.²⁸⁾ 하지만, 한국의 법률과 법원은 피해자의 reparation을 아예 ‘배상’으로 번역할 정도로 피해자 회복을 경제적 배상의 틀에서 사유해 왔다. 피해자의 다양한 회복의 방법이 마련되지 이미 수십년이 지났건만 ‘2015년 한일 장관의 위안부 합의’를 볼 때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조차 공권력 피해자들과 그 회복에 관한 무감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발표자는 이런 국제규범에 터하여 경제적 배상을 넘어서는 다양한 회복조치를 구상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보면서 기억과 기념, 나아가 제의(ritual)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관련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 법도 피해자 회복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이 특별법은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이라는 복지지원의 차원에서 출발하여, 2003년에 되어서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로 법명이 개명되었고, 여기서 기념사업이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및 학예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제11조 기념사업 등).²⁹⁾

‘2015년 한일 합의’는 2011년의 헌법재판소의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후속조치였음에도 한국과 일본의 정치엘리트에게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란 한 많은 할머니들을 경제적으로 위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2015년에 피해자들을 제대로 참여시키지 않았고 사후적으로 ‘합의’를 받아냈다는 비판에 대해서 불구하고 논의의 초점은 당시 생존자들과 피해자의 유족에게 배상금(위로금?) 10억엔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실정법의 견지에서 민·형사상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 국한하지만 위안부 사안에 있어서는 그 과거성, 지연된 정의의 책임을 인식하여 ‘사자(死者)들’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8) ICC 절차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가 크게 강화되었다. ICC 절차규정에서는 인권유린 피해자는 절차(proceeding)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강화는 이미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및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ICTR)가 그 선례를 제공하고 있다. Antonio Cassese,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eliminary Reflec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1(1999), pp. 144-171

29) 현재의 범명으로 개명된 것은 2017년이며 현재 법률에서 “기념사업”에는 위에 항목에 덧붙여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제11조 4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을 위한 위령사업”(제11조 5호)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관련법에도 규정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증언, 시각 자료 등을 모으고 체계화하는 등의 노력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트라우마에 쌓인 당사자들과 유족들의 사생활권리, 지적 저작권 문제 등이 얽혀 있고, 다수 공동 저작자들이 있는데 당사자 대부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인간적 문제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까지 한국에서 238명이 피해자로 등록하였고 특히 김학순, 강덕경, 황금주 등 초기 신고자들은 유엔, 일본 등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증언을 나누었다. 그동안 남한에서 국가에 등록하여 생존했던 240여명의 피해자는 피해 회복의 절차에서 ‘협회의 피해자’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20만 정도로 추산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어떠한가. 한국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위안소에서, 전장에서, 그리고 종전 이후 유기됨으로써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하지 않았다면, 위안소가 있었던 서남아시아 혹은 태평양 군도의 어딘가에서 디아스포라가 되어 생존했다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 혹은 한국에 구사일생으로 귀국하였으나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생존했다가 사망한 피해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피해자의 신원은커녕 숫자마저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여전히 ‘유령(spectre)’ - 죽지도 살아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존재하지 않지도 않은 존재 - 으로 우리 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이하게도, 이 ‘유령성’ 내지 ‘귀신성’은 위안부 문제에서 소환해야 할 주체성이 아닐까 한다.³⁰⁾ 이러한 존재성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살아있는 우리들이 “죽은 자들과 운명 공동체”임을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³¹⁾ 이른바 20만의 사실상의 피해자들을 법적 배상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광의의 피해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피해자들의 유족도 피해자인가. 위안소에서 태어나거나 이후에 태어난 피해자들의 자녀 (혹은 손자녀들)에게 전 위안부 어머니(혹은 할머니)를 두었다는 사실은 일생에 걸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다.³²⁾ 나아가 1920년대 혹은 30년대 초에 태어나서 ‘처녀공출’을 피하려고 피신했다가 피해를 보거나 피신했던 혼인한 여성들은 피해자인가. 혹은 뒤늦게 ‘위안부’ 문제에 공감하면서 같은 사회공동체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은 어떠한가. 피해자들을 지켜보아야 하는 시민들 역시 집합적 트라우마의 후예라는 점에서 가장 넓은 의미에서 피해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³³⁾ 이렇게 동심원적으로 피해자 구조를 그려낼 때, 이 식민지 젠더 범죄의 상흔은 집합적이고 중층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피해의 역사성과 집합성을 인식할 때, 그 회복의 방법 역시 그려야 한다. 이와 같이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피해자들의’ 회복 과정이란 바로 위안부 문제 해결의 과정과 일치하는 것이 아닐까.

Hamber와 Palmary는 ‘상징적 회복(Symbolic Reparations)’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30) 예컨대, ‘2000년 법정’에서 기소된 피의자들은 일본 국왕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로서 모두 망자들이었다. 대다수 피해자들도 망자라는 점에서, 이 법정은 ‘망자들의 법정’이었고, 법률가들이 망자들을 대리한 셈이었다.

31) 상례(喪禮)를 죽은 자와 산 자의 공동체 행위로 해석하는 점은 김혜순 시인의 개념을 가져온 것이다 (김혜순, <죽음의 자서전>, 2016 참고).

32) 앞서 본 ICC 규정에서도 피해자의 가족도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자로 간주한다.

33) 피해자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여성학논집 제30집 1호(2013), 36-72쪽; 김성례 “구술사와 기억: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한국문화인류학 제35권 2호(2002), 31-64쪽

상징 제작과 기념을 통한 회복의 방식에 대해 말한다.³⁴⁾ 이들은 상징적 회복에 공식적 사과, 공적 장소의 이름의 변경, 기억의 날의 지정, 박물관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것 등을 들면서 물질적 회복과의 균형을 이루는 ‘통합적 회복 프로그램(holistic reparation program)’이 필요하다고 한다.³⁵⁾ Maya Lin은 중국계 여성으로 20대 학부 시절 응모하였던 ‘Vietnam Memorial Wall’로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병사들에 관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건축가이자 예술가이다. 그녀는 그동안 말을 타고 무기를 든 용감한 남성 병사상이 아니라 전사자들 58,000명을 사망 시기에 따라 검은 벽에 모두 새김으로써 기억과 슬픔과 동참의 공간을 창조하였다.³⁶⁾ 이 상징적인 벽 앞에서 과거와 현재, 죽은 자와 산 자가 대면하게 되고, 유명한 영웅이 아닌 미국의 일반 병사들이 이름을 가진 존재로 기념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베트남전쟁에서의 ‘서브알턴’ 병사들을 표상한 작품이 아닐까 한다. 어쩌면 이 하나의 상으로 세계인의 베트남 전쟁의 상이 바뀌게 된 것은 아닐까. 한국의 위안부 소녀상은 전 국민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은 기억의 상징물이 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 공동체’를 표상하고 위로를 보내주는 다양한 회복의 방법과 모습이 창조되었으면 한다. 어쩌면 그러한 과정 자체가 거대한 회복의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어쩌면 오늘의 발표를 포함하여 그동안 해 온 나의 활동들도 이러한 ‘제의’를 치러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감사합니다>

34) Brandon Hamper & Ingrid Palmary, “Gender, Memorization and Symbolic Reparations,” in *Gender of Reparations*. Ruth Rubio-Mario (ed.), Cambridge Univ. Press, 2009

35) 관련하여, 김명희, “두 전쟁박물관과 젠더 인지적 공공역사의 가능성: 이행기 정의의 커뮤니티스,” <젠더와 문화>, 제11집 2호, 2018; 공공역사(public history)의 교육적 실천으로서의 구술사 방법의 의미와 가치, <역사교육연구>, 제 38집, 2021 참고할 것

36) Maya Lin: How Her Vietnam Memorial Became a Symbol of Design and Healing, The Impact of Maya Lin's Vision on Public Memorials Maya Lin: The 21-year-old Who Silence a Nation with a Wall, Bing 동영상, 그녀는 동영상에서 이 Vietnam Memorial Wall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가 누가 될 것인지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문】

토 론 문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1.

위안부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논의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당연한 과정이 아니었다. (1) 봉인되었던 역사의 문을 열어젖힌 위안부의 용감한 증언, (2) 이를 의제로 제기한 시민단체의 끊임이 않는 활동, (3)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개념화하고 삶의 여러 측면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위안부 운동의 내적 동력을 제공했던 학술 활동들. 이러한 움직임들이 현재의 위안부 관련 활동의 초석이 되었다. 우리 앞에 위안부문제는 운동과 학술 그리고 정치가 융합된 복합체로 놓여있다. 공간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한국(북한)·중국·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학술적,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위안부 문제에 공감한 많은 사람들은 그 역사적 경험을 되새김질 하면서 제국-식민지 문제, 여성문제 등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성찰을 통해 현재 삶을 더 평등하고 정의롭게 일구어 나갈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위안부 문제 규명을 위해 수십 년 간 활동해 오신 송연옥, 양현아 선생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두 분의 발표에는 그동안의 위안부 연구·운동에 쏟은 노력과 경험이 들어있으며, 학문적 성취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이론적 쟁점은 과제로 남겨두고, 두 분 선생님의 발표에서 토론자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과 발표자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말하고자 한다.

2.

송연옥 선생님의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의 위안부, 위안소제도의 규명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위안부 연구 대상에 대한 시간의 소급, 대상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위안부 연구자가 가져야 하는 '시간'은 15년 전쟁에 한정되지 않는다. 위안

부문제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러일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그 유래(기원)를 찾을 수 있다.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발표문 서두에서 언급하듯, 위안부(위안소)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던 사람(제도)뿐만 아니라, 강간, 성고문, 작부, 예기 등을 시야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에서만이 일본의 성폭력이 ‘위안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다양한 성폭력이 존재한 유동적이면서 복잡한 구조’에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기초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구사했던 성 관리 체제의 맥락을 철저히 점검하고, 특정한 사건을 뛰어넘어 (피해) 여성의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일관되게 보려하는 시각이 깔려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 대상을 본다는 것은 그것을 홀로 고립된 대상이 아니라, ‘총적, 횡적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세계내 존재는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문제는 이 관련 속에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거치고, 어떤 개입을 할 것인가 이다. 시간적 연속성과 횡적 구조를 어디에서 획정하고 구획해야할 지에 대한 해답은 객관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대상을 바라보는 연구자 위치에 대한 자기 성찰과 고민에서 나올 것이다.

과거 시간으로 확대되는 기원에 대한 추적은 위안부(위안소)에 대한 일관된 내러티브를 구성해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일관성을 구축하는 방식일 뿐이며, 특정한 시기에 발생하고 형성된 구체적 결과로서의 특정 행위와 특정 제도를 설명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위안부의 기원은 러일전쟁 이전의 청일전쟁이나 더 이전으로도 소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확장이 위안부(위안소)의 이해와 연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쭙고 싶다.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부터 램지어(John Mark Ramseyer)까지 위안부 문제를 회피·부정하기 위한 극우세력의 근대주의적, 국가주의적, 식민주의적 인식들은 피해자를 ‘보이지 않는(보고 싶지 않은)’ 존재로 취급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그들의 소리를 침묵하게 하였다. 그들은 위안부를 이른바 근대적인 ‘자유 계약 주체’를 상정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였고, 공창제와 위안소 제도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위안부 문제를 희석하려 하였다. 공창제와 위안소제도와와의 관계에서 보자면, 송연옥 선생의 주장과 하타류의 주장이 형식상으로는 동일하게 보이는 한편, 이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을 주장한 요시미 요시아키의 견해도 비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송연옥 선생의 주장은 상이한 두 개의 전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생님 입장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양현아 선생님은 “제 연구는 미미하고 답보상태인데 그 사이 구술사 증언, 과거청산 방법 기념의 방법 등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발표문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특히 위안부 구술을 대하는 시각과 접근법에서 큰 기여를 하였다. 구술을 증언과 자료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정조를 이해하였고, 구술을 넘두리가 아니라 주체화 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하였는데 이는 중요한 전환이었다.

덧붙이자면, 피해자들의 구술이 한풀이에 끝나지 않고, 변화하는 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을 단지 피해자들‘만’의 발전 과정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무엇이 선후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기 극복과 발전은 구술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줄 사람(면담자)의 존재,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야기를 인정하는 다수의 청취자와 그들의 인식)과 아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봐야 할 것이다. ‘subaltern은 말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subaltern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는가가 문제 지점인 것이다.

두 발표자 모두 위안부 문제를 식민지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의 식민지성’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제국의 근대화 과정은 식민지 없이는 ‘발전’을 성취할 수 없는 구조였다. 식민지로서 조선은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의 처분이 일본의 자의적인 정책 결정에 달려 있었고,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식민지에 대한 모든 정책 집행은 폭력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여기서 폭력이란 어린 소녀의 머리채를 끌고 가는 물리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강제 이행, 자유로운 주체로 위장한 법적 강제를 포괄한다. 식민지(성)가 제도적, 법적, 물리적 차원에서 폭력적 체제였다면, 이른바 위안부 동원의 ‘강제/자발’ 프레임에 대한 논쟁은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지만, 무용하고 잘못된 논쟁 프레임이며, 이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여기서 논의가 더 필요한 지점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성)이라는 보편적 언어가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서 우리는 무엇을 ‘식민지성’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어디가 빈약한 부분이며 더 연구해야 하는 부문인지에 대한 점검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토론문】

토 론 문

임경화(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1. 「일본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궤적과 전망」 토론문

본 발표문은 일본 내 ‘위안부’ 연구의 흐름을 여성주의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피해자 중심의 시각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와 과제를 짚는다. 특히 요시미 요시야키의 연구를 중심으로 일본 학계의 실증주의적 접근과 그에 대한 비판을 다룬다. 내용을 정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피해자 호칭과 언어의 정치성

송연옥 선생님은 피해자들이 ‘위안부’라는 용어를 거부한 사례를 언급하며 발표문을 시작한다.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가 피해 실태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언어가 피해자의 경험을 규정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 선택은 단순한 명명이 아닌 역사적 책임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연구자들은 이 용어가 가리키는 실체와 어휘의 의미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따옴표를 사용하며 이 용어를 문제화해 왔다. 한편, UN 보고서나 국제법에 뒷받침되어 피해자들이 ‘성노예’로 분류되어 왔다. 발표자도 뒤에서 90년대 한국의 ‘위안부’ 운동에 호응한 일본의 시민운동이 ‘종군위안부’에서 ‘일본군위안부’, 나아가 ‘성노예’로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역사적 정의를 실천하는 과정을 호칭 변경에 담아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법적·정치적 맥락에서 유효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노예가 아니었다. 나는 사람이다”(이용수)라고 비판하며 피해자이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싶은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자기 정체성을 외부에서 규정받는 방식의 명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명명 방식은 어떠한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한편, 발표자는 ‘위안부’라는 명명이 ‘위안소’를 둘러싼 유동적이면서 복잡한 성폭력의 구조를 단순화하여 다양한 피해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2) 일본 내 '위안부' 연구의 역사적 궤적

1970년대 women's lib 운동과 기생관광 반대운동이 '위안부' 문제의 현대적 재해석을 촉진. 특히 千田夏光 『従軍慰安婦』(1973)가 조선인 '위안부'는 '숫처녀'인데 비해 일본인 '위안부'는 '매춘부' 출신이라고 구별한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비판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지적, 김일면의 연구가 일본 여성과 조선 여성을 연속된 눈으로 보았다는 지적은 당시의 여성운동의 영향을 상기시키는 사례로 인상적이다. 더욱이 저변 여성들을 기록한 성과들과 그 정점에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 배봉기의 출현을 놓고 볼 때, '위안부' 연구에서 70년대가 지니는 폭발력(식민주의와 군사주의의 민낯을 폭로)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1980년대 일본의 '위안부'연구가 70년대의 공론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침체(후경화)된 이유가 세삼 궁금하다. 발표자는 그 이유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페미니즘의 상업화/대중화를 선도한 연구자들이 주목받는 대신, 침략전쟁과 식민주의에 비판적이었던 여성 연구자들이 주변화된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급진적이고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페미니즘이 후퇴하게 된 80년대의 사회적 배경을 밝혀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9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위안부'운동에 호응하여 각지에서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특히 바우넷을 중심으로 한 마쓰이 야요리의 진력으로 이루어진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개최와 이를 통해 제국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분명히 한 역사적 의의를 강조한다. 양현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송연옥 선생님도 이 법정에 관여하였고, 특히 '일본인 위안부'를 동 법정에서 이슈화하는 데 힘썼다는 사실도 그것이 지니는 문제의식과 함께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두 발표에서 이 법정에 대한 평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양현아 선생님은 2000년 여성국제법정이 일본군 성노예제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선고했지만, 식민지성은 법리에 충분히 통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김윤옥 정대협 대표도 식민주의나 민족차별 같은 각국의 개별적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젠더문제 등으로 희석되었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 송연옥 선생님은 일본측도 한국측도 '일본인 위안부' 문제를 꺼린 점에서 일본 측의 여성주의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한국 측 역시 민족주의보다 식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본다. 이 차이에 대한 두 발표자의 의견을 들으며 이 차이가 갖는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었으면 한다.

3. 요시미 요시아키의 연구와 논쟁

요시미는 방위성 자료를 통해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와 조직적 관여를 실증적으로 증명. 이후 역사수정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실증주의 연구를 심화시켜 나갔다. 그러나 요시미는 '위안부'와 공창제의 차이를 강조하며 '군용 성노예' 개념을 정립하였지만, 공창제와 '위안부'를 서열화하여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발표자의 비판은 유효하다. 공권력에 의해 생산되어 그 권력의 합리화에 복무하는 공문서 중심의 역사

학 연구가 지니는 소외된 존재를 배제하는 문제는 실증주의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의 성폭력 구조로 확장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제언은 향후 '위안부' 연구의 전망에서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안소'제도와 공창제를 동일시하는 시각과 함께 그 사이의 (서열화가 아닌) 구조적 차이는 어떻게 인식되고 다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하다. 특히 '위안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다양한 성폭력이 존재한 유동적이면서 복잡한 구조', 혹은 양현아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심원적으로 그려지는 피해자의 구조'와 어떻게,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는지도 궁금하다. 또한 Sabine Frühstück의 Colonizing Sex: Sexology and Social Control in Modern Japan (2007)처럼 글로벌한 현상으로서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공창제 사례 속에서 일본의 공창제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 연구에 대한 기대도 가져 본다.

2. 「소수자들의 강력한 목소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의 목소리가 남긴 것들」 토론문

양현아 선생님의 발표는 개인적 경험과 20여 년의 연구 여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접근한 발표자의 연구 동기와 방법론, 그리고 역사적·법적 실천을 중심으로 서술이 시작된다. 우선 유학 중 김학순 피해생존자의 언론 인터뷰에 충격을 받아 위안부 연구를 결심, 그 계기로 '2000년 여성국제법정' 준비에 참여. 그 일환으로 피해자 증언조사팀 조직하여 『증언집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출간하며 핵심 방법론으로 '서브알터니티(subalternity)'을 제시, 여성국제법정에서 남북 공동검사단으로 활동, 초국가적인 피해자 중심의 법정. 하지만 국제인권법과 여성주의 법리의 서구 중심성과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대변할 국제법 논리 부재라는 한계도 체감.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네 가지 제언을 한다. 특히 발표자는 이 "제언의 씨앗이 여성국제법정에 다 담겨 있었다"고 하듯이, 본 발표는 이 법정을 둘러싼 분석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증언과 집합기억의 재구성

'묻기에서 듣기로'의 증언 방법론의 전환으로 서브알턴 피해자 여성들에게 발화의 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주체화하고 고난을 극복한 강인한 생존자로 재현하는 생애 구술사의 생산을 이끌 수 있었다. 이 구술사는 또한 귀국 이후의 지속된 피해와 한국 사회의 책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피해 회복에는 포스트식민주의적 관점과 젠더 감수성을 갖춘 이행기 정의론의 필요성을 역설. 즉, 피해자의 목소리를 단순한 증언이

아닌, 역사와 기억을 재구성하는 주체적 행위로 바라본다. 양현아 선생님은 이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정체성, 정의, 그리고 역사 인식의 전환을 이끄는 실천으로 제시한다.

2) 일본군 성노예제의 법리적 재구성과 역사적 맥락화

일본군 성노예제를 단순한 '전시 성폭력'으로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반인권 범죄의 복합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국제법 속 '성노예제'의 등장으로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 안으로 들어온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국제 판례와 전시 성폭력 법리의 발전으로 강간의 정의가 신체적 행위에서 심리적·사회적 폭력으로 확장되었고, 피해자의 '동의'는 이미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음. 특히 여성국제법정의 남북한 공동기소장은 위안소 내 강간 외에도 강제 동원, 사기, 협박, 차별, 국외이송, 종전 후 이송 불이행의 범죄가 포함된 복합적 범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한 '전시 성폭력'으로 고립시키는 것은 일본 정부의 탈역사화 전략과 한국 정부의 남성중심적 시각이 작동한 결과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일본군 성노예제를 일반화하여 피해자의 역사적 맥락과 식민주의 구조가 탈각되면 피해자들을 타자화하고 침묵을 강요할 수 있다고 지적.

3) 일본군 성노예제의 식민지성 규명

일본군 성노예제의 식민지성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경험과 법적 책임 논의에서 이 핵심 요소가 어떻게 간과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 우선 조선인 피해자의 다수가 공권력 집행자에 의해 동원됨. 피해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전역으로 이송되었으며 이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성노예제의 증거. 조선 여성들은 일본군의 전투 수행을 따라 이동하며, 완전한 종속과 노예화 상태에 놓임. 또한 장기 감금과 성폭력 지속됨. 종전 후에도 폭격·기아·현지인의 위협 속에 방치됨. 하지만,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일본군 성노예제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선고했지만, 식민지성은 법리에 충분히 통합되지 않음. 조선 여성의 피해는 '식민지인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적극적인 법적 논리 구성이 필요함.

조선 여성은 일본군의 '적'도 '아군'도 아닌 식민지적 존재로서, 법적 관계가 모호함. '체계적 강간' 개념은 유용하지만, 조선과 일본 간의 전쟁이 아닌 식민지 지배 구조 속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법리적 재구성이 필요. 즉, 일본군 성노예제는 식민지 지배 구조 속에서 발생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젠더폭력으로, 법적 책임과 역사적 인식에서 식민지성을 중심에 둘 것을 강력히 주장.

4) 피해자 회복의 철학과 방법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회복(reparation)을 단순한 배상 개념을 넘어서 철학적·상징적·집합적 치유 과정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언.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변화도 회복의 일부로 간주됨. 한국 법률은 회복을 '배상'으로 번역하며 경제적 보상 중심으로 사고. 2015년 한일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대한 정치 엘리트의 무감각을 드러냄. 또한 피해자의 범주 확장 필요성 제시. 피해자 구조는 동심원적이고 중층적이며, 회복도 그러해야 함. 피해자 회복을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닌, 기억·기념·참여·공동체 치유를 포함하는 통합적 회복 프로그램으로 재정의. 그녀는 피해자 범주의 확장과 '유령성' 개념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이 곧 역사적 정의와 사회적 회복의 과정임을 강조.

송연옥 선생님의 발표와 양현아 선생님의 발표는 피해자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도, 동일하게 '여성주의와 탈식민주의의 시각' 혹은 '포스트식민적' 관점과 젠더 관점이 이행기 정의 실천에 요구된다고 보았다. 또한 양현아 선생님도 죽은 자 등을 포함한 '광의의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공동체'를 상정하고 송연옥 선생님도 공창도 '위안부'도 성노예였다고 하고 일본인 '위안부'도 이슈화하며 소외나 배제, 구별되지 않는 광의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양현아 선생님은 일본인과 식민지 여성의 피해 사이의 동등성 논리를 거부하고 동지도 적도 아닌 '식민지성에 기초한 젠더폭력'으로서 일본군 성노예제를 바라보고자 하였고, 송연옥 선생님은 '위안부'와 공창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식민지 조선에 주목한다. '위안부' 피해자의 고발에 응답하며 개시되었던 두 연구자의 30여 년의 연구 궤적이 다른 듯 닮은 것에서 '위안부' 연구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



일본군'위안부'연구의 궤적들

실상의 규명인가 책임의 입증인가
: 일본군'위안부' 역사 연구의 두 방향
이아리(서울대학교)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계보학 : 사회학의 지평
김명희·박재홍(경상국립대학교)

재현, 비재현 너머 : 일본군'위안부' 문학을 중심으로
장수희(동아대학교)

실상의 규명인가, 책임의 입증인가 : 일본군'위안부' 역사 연구의 두 방향

이아리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1. '전장(戰場)'을 보는 연구
2. '식민지 조선'을 보는 연구
3. '후발 제국 일본'을 보는 연구

나가며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 문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사 연구로 접근하기 가장 까다로운 주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역사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를 역사적 실상의 규명이라고 하면 크게 틀리지 않지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연구는 그에 그치지 않는 현재적 과제로서의 목표가 더 요구되어 왔다.

시민 운동과 함께 본격화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연구에는, 이것이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의 억압이자 여성의 인권을 말살한 전쟁 범죄로서 이를 주도한 일본 정부와 군의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표가 뚜렷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임 입증'의 문제는 크게 법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에서 진행되어, 법학과 역사학이 큰 역할을 나누어 맡게 되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법정 투쟁으로 집중되면서 법적인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이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그 법정 투쟁에서조차 판결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논거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역사 연구는 처음부터 책임 소재의 입증을 위한 기초 토대로서 요청되었고, 큰 짐을 떠안게 되었다.³⁷⁾

문제는 처음부터 이 문제가 예민한 정치적 사안으로 비화하면서 대립하는 진영과 논쟁의 구도에 갇힌 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에서는 역사부정론자들이 '역사'의 이름으로 왜곡된 말을 쏟아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직된 프레임 속에서 민족주의적 감성을 해치지 않는 이야기만을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실제 피해와 가해는 여러 시공간에 걸쳐 많은 층위로 중첩되어 있다.

특정 소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듯 여겨지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오해를 사기도 하고 비난을 듣기도 하는 이 주제가 역사 연구자로서는 당혹스럽다. 큰 책임은 요구되면서 학문적 견해를 펼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극단적으로 좁다.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역사 전공의 연구자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 연구는 지금까지 역사적 실상의 규명과 책임 소재의 입증이라는 무거운 짐을 양 어깨에 지고 걸어온 외줄타기였다.

본문에서는 한국에서 나온 역사 연구를 중심으로 이 역사적 실상의 규명과 책임 입증이라는 두 목표가 어떤 길항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학문적 논의로서 역사 연구가 본격화되는 것은 2000년대 이후였고, 이것은 어찌 보면 일본에 비해 한발 늦은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가 시민운동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 초중반 시점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를 비롯한 일본의 학자들과 아시아여성기금, WAM 등 단체에서 발간한 자료집과 그에 기반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자료의 발굴이나 접근에 있어서도 불리하고 연구도 한발 늦었으며, 피해 당사국이기에도 당위성에 대한 요구는 높았던 한국에서의 연구는 이런 배경 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척되어 왔는가. 또 한국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국면을 어떻게 돌파하려 했는가.

기존의 연구사 정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 연구를 모두 아울러서 우익 수정주의자들의 논의까지 포괄하는 위에,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일본군의 개입 및 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 식민성 등을 주요 논점으로 삼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의 '위안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점이 상수값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논의를 나누는 의미가 없다. 대신 이 글에서는 연구가 어느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분류별로 앞서 말한 두 가지 방향의 지향이 어떻게 교차하고 또 긴장 관계를 만들어 내는지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37) 일례로, 2021년과 2023년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 '국가면제(주권면제)'라는 법적 개념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면제 법리에 대한 판단 역시 역사적 연구의 축적을 기반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를 논하기 위해 1937년 9월 「야전주보규정(野戰酒保規程)」 개정 설명서를 제시하고 육군성의 '위안소' 기획 및 운영, '위안부'들의 수송을 위한 무료도항증과 국외이동용 신분증명서를 발급했던 사실 등을 명시한 재판부의 판결문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정치적 상황의 변화나 대외적으로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활발한 논의가 나왔던 경우는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ex. 2007년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미국 하원에서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전후로 강제성을 부정하는 언설을 내놓았으며, 이에 대응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강제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일-『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2021년 하버드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의 논문이 ‘위안부’의 자발성을 주장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로 그에 대한 비판과 반론이 제기된 일 등. 다만, 이러한 국면들을 넘으며 ‘협회의 강제연행’론을 견제하고, 업자들에 의해 다수가 취업사기 및 인신매매의 방식으로 동원 혹은 징모되었음을 이해하며, ‘노예제’에 대한 국제법적 규정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연구자들 안에서는 정착된 것은 주목할 만함.)

1. 전장(戰場)을 보는 연구

연구가 운동에서 크게 분리되지 않았을 때, 역사적 실상의 규명은 곧 책임 소재의 입증과 직결된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첫 번째 유형의 연구들을 이 글에서 ‘전장(戰場)을 보는 연구’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들은 전장의 ‘위안소’ 운영 실태 및 패전 후 귀환 과정을 면밀하게 밝히는 데 주력하고, 그를 통해 일본군의 직접 개입이나 연루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 대표적인 예시로 강정숙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초기부터 운동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던 저자는 2010년 박사논문을 완성하면서 그때까지의 논점과 논의들을 가능한 망라하여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다루고자 하였다.³⁸⁾ 곧, 5장 체제의 박사논문에서 각 장을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배경, 제도적 수립, 군위안소의 운영 및 ‘위안부’ 생활의 실태, 패전과 귀환에 대해 각 장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 따라서 단지 전장의 ‘위안소’만이 아니라, 인신매매 문제나 국제연맹의 조약, 업자들의 성격, 식민지 조선에서

38) 강정숙, 「일본군 ‘위안부’제의 식민성 연구 - 조선인 ‘위안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박사 논문의 전후로 발표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정숙,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기업의 역할 - 샛코(콘동)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60, 역사비평사, 2002 ; 「일제 말기 오키나와 다이토(大東)제도의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 「인도네시아 팔렘방의 조선인 명부를 통해 본 군‘위안부’ 동원」, 『지역과 역사』 28, 부경역사연구소, 2011. ; 「제2차 세계대전기 인도네시아 팔렘방으로 동원된 조선인의 귀환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2. ; 「일본군 위안소 업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96(1),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8.

의 동원 구조 등에 대해서도 모두 서술하고 있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 뚜렷한 저자의 견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이 연구를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장은 제4장 「지역별 군위안소 운영과 조선인 군'위안부」, 제5장 「일제 패전과 조선인 '위안부'의 귀환」일 것이다. 자료의 측면에서도 강정숙은 폭넓은 자료군을 섭렵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발굴, 편찬된 주요 자료집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제4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명부 자료들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팔렘방 지역의 실태에 가 닿으려는 노력들은 명부 자료들에 구술 면담 자료와 일본군 자료들을 엮어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패전 직후 연합군 측에 '위안부'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여성들을 임시 간호부로 편입시켰던 정황을 강조하였다.

- 그리고 강정숙의 논문에서와 같이 '각지 위안소의 실태'와 '귀환'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은 이렇듯 전장에 주목하는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각지 위안소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밝히고자 하는 측면에서 공들인 성과를 내놓은 연구자는 하종문이다. 본래 '전시노동력정책'을 위시한 일본군현대사를 전공하던 그는 2000년 12월 도쿄에서 개최된 시민법정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2000년 법정)에 한국측 준비단 일원으로 참가했던 경험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연구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한다.³⁹⁾ 그 직후 발표한 논문에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가해 체계를 실증적으로 밝혀내겠다는 입장이 드러난다.⁴⁰⁾ 이때 '위안소'를 군기지 부근의 성매매 관련 업소와는 질적으로 다른 "일본군의 조직 체계와 작전에 깊숙이 결부된 군사시설"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그것을 위해 선택한 것은 "중대(독립된 소대 포함) 이상의 부대가 동원령을 수령한 날부터 복원을 완료한 날까지 작성이 의무화된 공식 기록물"인 진중일지 자료였다. 위안소의 개설과 운용이 관련 부대의 작전과 명령 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일본군이 위안소를 출입하는 행위는 '외출'에서부터 비롯되는 공식적인 군사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¹⁾ 이렇게 진중일지 자료를 통해 구체화된 '위안소' 운영의 상은 그의 저서에서 시기별, 지역별로 체계화되었다. 즉 만주사변 시기 출현한 위안소 시스템은 중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정교해지고 체계적으로 변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후 확장되어 오키나와 전투즈음 완성단계 였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사료의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그의 입장이 '위안소'가 '평시의 성매매 시설'과는 다른 군대 부속 시설이었음을 강조하는 데서 변하지 않는 것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9) 하종문, 『진중일지로 본 일본군 위안소』, 휴머니스트, 2023, 6-7쪽.

40) 하종문, 「일본군'위안부'의 동원 체계」, 『성곡논총』 32(1), 성곡언론문화재단, 2001.

41) 하종문, 「진중일지 속의 부대 운용과 일본군 위안소 제도」, 『동북아역사논총』 64, 동북아역사재단, 2019 ; 하종문, 「오키다이트섬의 일본군 위안소」, 『역사문제연구』 26(2), 역사문제연구소, 2022.

- 하종문과 마찬가지로 ‘위안부’의 군속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는 논의는 신영숙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신영숙은 종군간호부 연구의 후속으로서 일본군 ‘위안부’를 종군간호부와 비교하여 양자가 모두 여자군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논하였다.⁴²⁾
- 최종길은 관료 연구를 했던 지식에 기반하여 행정문서를 꼼꼼하게 다시 읽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문서의 수발신 관계를 통해 위안부 모집과 관련한 행정 명령이 오가는 과정을 추적하여, 일본군의 개입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⁴³⁾
- 사료에 대한 새로운 발굴이 이어지면서 그것이 새로운 연구를 끌어내는 추동력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하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힘입어 상세한 각론의 분석이 진척)
- 박정애는 만주 지역 및 중국 저장성 지역 위안소와 조선인 ‘위안부’의 피해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진화계림회 명부 등 새롭게 발굴된 명부 자료가 쓰였다.⁴⁴⁾ (접객업 및 인신매매에 대한 입장은 다른 연구자들과 차이가 있음)
- 공준환은 연합군 자료에 주목하여 버마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분석하였다.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실질적인 주체는 일본군이었으며, 피해자의 출신 민족을 기반으로 위안소가 구성되어 있었음을, 그리고 일본군이 버마에서 패배할 때 ‘위안부’를 전장에 남겨두거나 방치하였음을 논하였다.⁴⁵⁾
- 이선이는 중국에 남아있는 일본군 관련 구술 자료를 분석하여 ‘위안부’와 위안소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중일전쟁기 일본군에 의한 중국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구술 분석 연구에 뒤이어,⁴⁶⁾ 일본군 전범 9명 및 일본군 헌병의 진술서를 분석하여 그들의 인식 속에서 ‘위안소’는 요리옥이나 유곽(“妓館”)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집단 강간 장소임을 고백하는 증언이 동시에 존재함을 보였다. 또한 일본군이 군인의 기강과 풍기유지를 위해 공창제도를 더 직접적으로 관리하고자 위안소 운영하였으며, 군의 명령을 받고 조선 등지에서 여성을 강제로 모집하거나 이미 현지에 데려온 여성들을 위안소에 공급하는 정황이 보인다는 점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⁴⁷⁾

42) 신영숙,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위안부’의 정체성 - 여자 군속의 종군간호부와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5, 동북아역사재단, 2009. 초기 연구는 신영숙·유해정·김미정, 「해남도 일본군 ‘성노예’ 실태 조사 연구 보고」, 『여성연구논총』 17,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2002. 등.

43) 최종길, 「행정문서 재구성을 통해본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성립과 운용」, 『한일관계사연구』 51, 한일관계사학회, 2015. ; 최종길, 「타이완척식주식회사자료를통해본 일본군위안소설치와운영」, 『일본연구』 27,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7.

44) 박정애, 「만주 지역의 일본군 위안소 설치와 조선인 ‘위안부’」, 『아시아여성연구』 55(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6. ; 박정애, 「중국 저장성(浙江省) 진화(金華)의 위안소와 조선인 ‘위안부’」, 『페미니즘 연구』 17(1), 한국여성연구소, 2017.

45) 공준환, 「연합군 자료를 통해 본 버마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 『동북아역사논총』 66, 동북아역사재단, 2019.

46) 이선이, 「일본군의 성폭력에 대한 一考察」, 『사학연구』 120, 한국사학회, 2015. ; 이선이, 「중일전쟁시기 덩링(丁玲)의 일본군 성폭력재현과 1956년 전범재판 그 후 피해자 증언의 의미」, 『중국학보』 80, 한국중국학회, 2017.

47) 이선이, 「일본군 전범의 자필진술서를 통해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화사학연구』 65, 이화사학연구

- 조규현은 위안소 운영 과정에서 일본군이 파놉티콘 체제, 위생과 금주, 불량행동 단속 규율을 이용하였다는 의견을 더하기도 하였다.⁴⁸⁾
- 한편, 귀환 과정에서 '위안부'의 모습을 규명하려는 시도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비교적 초기 연구로 중국지역에서 귀환하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들의 행적을 밝히려 한 강영심의 연구가 있다.⁴⁹⁾
- 강제연행과 귀환 문제를 다루어 온 황선익은 일본군의 패전 이후 현지에 방기된 일본군 '위안부'들의 상황을 종전 후 중국 상해지역에 수용된 한인 여성들을 통해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⁵⁰⁾
- 주영음의 석사논문은 1945-46년 우한지역의 한인의 귀환과정을 일본군 '위안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역시 그들의 험난했던 사정을 서술하고 있다.⁵¹⁾
- 이처럼 '전장을 보는 연구'들에서는 역사적 실상의 규명이 곧 일본 정부나 일본군의 책임소재의 입증이라고 여겨지고 양자가 충돌하거나 갈등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새로운 사료의 발굴이나 수집은 즉각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학술 논의의 초기 단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성과를 내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2. 식민지 조선을 보는 연구

두 번째로 살펴볼 범주는 '식민지 조선을 보는 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선 사회 내부의 구조와 맥락 속에 놓고 살펴봄으로써 '식민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고자 했다. 앞서 본 '전장을 보는 연구'들과는 달리, 이 유형에서는 '역사적 실상의 규명'과 '책임소재의 입증'이 교차되거나 착종되는 양상을 보인다.

소, 2022. ; 이선이, 「일본군 헌병의 진술을 통해서 본 만주 지역의 일본군 위안소 - 공창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94,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

48) Kyu-hyun Jo, 「For the Sake of Providing Comfort to All Imperial Soldiers Progressing on Every Front - An Analysis of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Japanese Panopticon Over Comfort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8(1),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23.

49) 강영심, 「종전 후 중국지역 '일본군 위안부'의 행적과 미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4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50) 황선익, 「해방 후 중국 上海지역 일본군 '위안부'의 집단수용과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황선익은 중일전쟁기 대만지역 한인 강제 연행을 다루면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규명한 초기 연구(「일제강점기 대만지역 한인사회와 강제연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51) 주영음, 「1945~1946년 중국 우한 지역 한인의 수용과 귀환 - 일본군 '위안부'를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74, 역사실학회, 2021. ; Zhou, Yingyin, 「1945~46년대 우한지역 한인의 귀환과정 - 일본군 위안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 초기의 연구 : 정진성
- 조선인 '위안부'의 가혹한 처지와 피해 실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식민성에 방점.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개정판. 2016)

정진성, 「일제 말 강제 동원기의 기업 위안부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63, 한국사회사학회, 2003.

정진성, 「전시 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한국여성학』 19(2), 한국여성학회, 2003.

정진성, 「군위안부 강제연행에 관한 연구」, 『한국학』 21(4),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정진성, 「일본 군“위안부” 정책의 본질」,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42, 한국사회사학회, 1994.

- 대표적 연구 : 윤명숙
- 2010년대 이후 이 식민성을 논하는 방향이 달라졌다. 협의의 강제성 견제.
- 대표적으로 윤명숙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식민지 동원이 가능했던 구조적인 조건을 찾는 방향. 구체적으로는 유흥업, '위안부'제도에 가담하게 되는 업자들의 상황.
-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1장과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꼼꼼하게 추적한 2장 사이의 논조 차이. '역사적 실상의 규명'과 '책임 소재의 입증'을 둘러싼 긴장이 드러남.

윤명숙 지음, 최민순 옮김,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2015.

윤명숙,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의 국가책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 김미정 : 성 동원을 군'위안부' 동원과 기업 '위안부' 동원으로 나누어 논함

김미정, 「전시체제기(1937-1945) 조선여성에 대한 '성(性)동원' 실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신영숙,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의 구조-영리유괴 등 재판 자료를 중심으로」 김경일 외, 『동아시아 일본군'위안부'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 박정애 : 위안부 개념 및 수양녀 문제를 식민지 조선의 맥락에서

- 박정애,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 문제와 인신매매」, 『역사연구』 44, 역사학연구소, 2022.
- 박정애, 「총동원체제기 식민지 조선에서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의 착종 연구 - 정신대의 역사적 개념 변천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9(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0.
- 한혜인, 서현주, 도노무라, 이아리 : 인사소개업 및 업자와 관련한 논의들
- 한혜인, 「총동원체제하 직업소개령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 -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차별적 제도운동을 중심으로」, 『사람(성대사람)』 46, 수선사학회, 2013.
- 서현주, 「일제하 예기·창기·작부 소개업의 실태와 일본군 '위안부' 동원 - 〈조선직업소개령〉과 소개업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74, 한일관계사학회, 2021.
- 도노무라 마사루, 「위안부는 어떻게 모아졌는가-사적 권유 직업소개 강제동원의 관계를 둘러싸고」, 위안부 동원과 재현의 정치학 (제3회 동아시아 평화와 화해의 목소리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의 목소리, 2017 ; 外村大, 「娼妓等周旋業と慰安婦の要員確保」『龍谷大学経営学論集』第61巻2号、2022年5
- 이아리, 「일제하 직업소개사업의 이원적 구조와 영리 소개업 통제의 한계」, 『민족문화연구』 9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2.

- 식민지적 동원의 내용. 논의에 있어 가장 변화가 많고 긴장 관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일 것.

3. 후발 제국 일본을 보는 연구

마지막으로 살펴볼 연구들은 '후발 제국 일본을 보는 연구'로 명명하고자 한다. 2010년대 이후 문제제기가 시작되어 2015년 이후 본격화되었기에 가장 최근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 대표적 연구자 : 박정애
구체적으로는 공창제와 인신매매를 둘러싼 맥락을 넓은 시야에서 규명하려 함.
- 송연옥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군사주의가 더 강력한 동원을 가능하게 했음을 강조하면서 서도, 여성의 성을 이용한 일본 제국주의가 그 기저에 깔려 있음을 더욱 근본적인 조건으로 보았음.
- 실상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직접 개입', '강제성'과 같은 논의에 갇히는 것을 벗어나 더 넓은 범위의 책임 소재를 묻고 있음.

송연옥 김영 편저, 박해순 옮김, 『군대와 성폭력-한반도의 20세기』, 선인, 2012

송연옥, 김귀옥 외,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 선인, 2017

송연옥, 「제국 일본의 침략전쟁과 성 정치 - '위안부'와 '공창'을 관통하는 군사주의」, 『역사연구』 52, 역사학연구소, 2025.

박정애, 「1921년 여성아동매매 억제 국제협약과 식민주의 - 일본의 협약 가입과 식민지 제외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52, 역사학연구소, 2025.

박정애, 「공창제 개념의 재정의를 위한 연구사 검토와 비평 - 탈식민과 젠더 관점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34,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24.

박정애, 「국제연맹의 동양 여성매매 조사와 식민지 조선 - 일본 정부의 대응과 식민지 비가시화」, 『역사문화연구』 87,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2023.

박정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 - 공창제 정쟁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페미니즘 연구』 19(2), 한국여성연구소, 2019.

박정애,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 『사학연구』 120, 한국사학회, 2015.

강경자, 「근대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조선인 '위안부' 정책의 역사적 특수성」, 『일본연구』 60,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24.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공권력과 강제동원성 - 일본 재판부의 판결문 속 '국가 무담책' 법리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62, 단국대학교 동아시아인문융합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21.

, 「대일전범재판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성' - 도쿄재판의 전범기록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52,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20.

임우경, 「동아시아 냉전과 군 '위안소'의 연쇄」, 『일본문화연구』 81, 동아시아일본학회, 2022.

任佑卿, 「일본군위안소에서 대만군 '特約茶室'로」, 『중국어문학논집』 118, 중국어문학연구회, 2019.

나가며

- 포스트 메모리 시대의 일본군 '위안부' 연구는?
- 가능성 : 로컬에서의 접근 등

참고문헌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 강정숙, 「일본군 '위안부'제의 식민성 연구 - 조선인 '위안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 강정숙 외, 『덧칠된 기록에서 찾은 이름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명부 분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2019
- 김경일 외, 『동아시아 일본군 '위안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 박정애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과제Ⅲ-관점과 실태』, 동북아역사재단, 2020.
- 송연옥 김영 편저, 박해순 옮김, 『군대와 성폭력-한반도의 20세기』, 선인, 2012
- 송연옥, 김귀옥 외,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 선인, 2017
- 안병직 편역, 2013,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이숲.
- 이인선.황정임.양애경.김동식.강정숙.조운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엮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풀빛, 2001.
- 하종문, 『진중일지로 본 일본군 위안소』, 휴머니스트, 2023.

논문

- 강경자, 「근대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조선인 '위안부' 정책의 역사적 특수성」, 『일본연구』 60,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24.
- _____,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공권력과 강제동원성 - 일본 재판부의 판결문 속 '국가 무담책' 법리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62, 단국대학교 동아시아인문융합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21.
- _____, 「대일전범재판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성' - 도쿄재판의 전범기록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52,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20.
- 강영심, 「종전 후 중국지역 '일본군 위안부'의 행적과 미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4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 강정숙, 「일본군 위안소 업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96(1),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8.
- _____, 「제2차 세계대전기 인도네시아 팔렘방으로 동원된 조선인의 귀환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2.
- _____,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제 문제의 쟁점과 과제」, 『젠더리뷰』 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2.
- _____, 「인도네시아 팔렘방의 조선인 명부를 통해 본 군 '위안부' 동원」, 『지역과 역사』 28, 부경역사연구소, 2011.
- _____, 「일제 말기 오키나와 다이토(大東)제도의 조선인 군 '위안부'들」,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 _____,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기업의 역할 - 삿코(콘돔)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60, 역사비평사, 2002.
- 공준환, 「연합군 자료를 통해 본 버마의 일본군'위안부' 제도」, 『동북아역사논총』 66, 동북아역사재단, 2019.
- 김미정, 「전시체제기(1937-1945) 조선여성에 대한 '성(性)동원' 실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은경, 「일본군'위안부' 기억 장소로서 초국적 지식장 - 영어권의 '위안부'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42, 역사학연구소, 2021.
- 김창록, 「'람지어 사태' -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의 추가 사례」, 『역사비평』 135, 역사비평사, 2021.
- 박정애, 「1921년 여성아동매매 억제 국제협약과 식민주의 - 일본의 협약 가입과 식민지 제외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52, 역사학연구소, 2025.
- _____, 「공창제 개념의 재정의를 위한 연구사 검토와 비평 - 탈식민과 젠더 관점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34,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24.
- _____, 「국제연맹의 동양 여성매매 조사와 식민지 조선 - 일본 정부의 대응과 식민지 비가시화」, 『역사문화연구』 87,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2023.
- _____,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 문제와 인신매매」, 『역사연구』 44, 역사학연구소, 2022.
- _____,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 비판」, 『동북아역사리포트』 15, 동북아역사재단, 2022.
- _____, 「총동원체제기 식민지 조선에서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의 착종 연구 - 정신대의 역사적 개념 변천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9(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0.
- _____,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 - 공창제 정쟁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페미니즘 연구』 19(2), 한국여성연구소, 2019.
- _____, 「중국 저장성(浙江省) 진화(金華)의 위안소와 조선인 '위안부」, 『페미니즘 연구』 17(1), 한국여성연구소, 2017.
- _____, 「만주 지역의 일본군 위안소 설치와 조선인 '위안부」, 『아시아여성연구』 55(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6.
- _____,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 『사학연구』 120, 한국사학회, 2015.
- _____, 「일본군 '위안부', 무엇이 문제인가」, 『기독교사상』 666, 대한기독교서회, 2014.
- _____,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말하는 또 하나의 역사퍼즐 안병직 번역·해제,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이숲, 2013.」, 『여성과 역사』 19, 한국여성사학회, 2013.
- 서현주, 「일제하 예기·창기·작부 소개업의 실태와 일본군'위안부' 동원 - 〈조선직업소개령〉과 소개업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74, 한일관계사학회, 2021.
- _____, 「타이국립공문서관 소장 일본군'위안부' 자료 소개」, 『동북아역사논총』 66, 동북아역사재단, 2019.
- _____, 「2006~2016년간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성과와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3, 동북아역사재단, 2016.
- 소현숙, 「한국 근대 여성사/젠더사 연구 동향과 과제」, 『역사문제연구』 27(2), 역사문제연구소, 2023.

- 송연옥, 「제국 일본의 침략전쟁과 성 정치 - '위안부'와 '공창'을 관통하는 군사주의」, 『역사연구』 52, 역사학연구소, 2025.
- 신영숙,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위안부'의 정체성 - 여자 군속의 종군간호부와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5,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신영숙·유해정·김미정, 「해남도 일본군 '성노예' 실태 조사 연구 보고」, 『여성연구논총』 17,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2002.
- 윤명숙, 「조선인'위안부'문제와 역사수정주의 -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85, 한일관계사학회, 2024.
- _____,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의 국가책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 이선이, 「일본군 헌병의 진술을 통해서 본 만주 지역의 일본군 위안소 - 공창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94,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
- _____, 「일본군 전범의 자필진술서를 통해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화사학연구』 65, 이화사학연구소, 2022.
- _____, 「중일전쟁시기 덩링(丁玲)의 일본군 성폭력재현과 1956년 전범재판 그 후 피해자 증언의 의미」, 『중국학보』 80, 한국중국학회, 2017.
- _____, 「일본군의 성폭력에 대한 一考察」, 『사학연구』 120, 한국사학회, 2015.
- 이지영, 「일본군'위안부' 구술·증언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 - 증언집, 사진집,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32,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2.
- 임우경, 「동아시아 냉전과 군 '위안소'의 연쇄」, 『일본문화연구』 81, 동아시아일본학회, 2022.
- _____, 「일본군위안소에서 대만군 '特約茶室'로」, 『중국어문학논집』 118, 중국어문학연구회, 2019.
- 정진성, 「미하원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 논의과정에서 제기된“협약의 강제성”과 그역사적 진실」,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76, 한국사회사학회, 2007.
- _____, 「전시 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한국여성학』 19(2), 한국여성학회, 2003.
- _____, 「일제 말 강제 동원기의 기업 위안부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63, 한국사회사학회, 2003.
- _____, 「군위안부 강제연행에 관한 연구」, 『한국학』 21(4),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 _____, 「일본 군"위안부" 정책의 본질」,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42, 한국사회사학회, 1994.
- 鄭鎭星·姜昌一·金旻一, 「일본군 위안부의 생활실태와 연구에 대한 검토 - 일본군위안부 연행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연행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27(3), 성곡언론문화재단, 1996.
- 주영음, 「1945~1946년 중국 우한 지역 한인의 수용과 귀환 - 일본군 '위안부'를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74, 역사실학회, 2021.
- _____, 「1945~46년대 우한지역 한인의 귀환과정 - 일본군 위안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 최종길, 「타이완척식주식회사자료를통해본 일본군위안소설치와운영」, 『일본연구』 27,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7.
- _____, 「행정문서 재구성을 통해본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성립과 운용」, 『한일관계사연구』

- 51, 한일관계사학회, 2015.
- 하종문, 「오키다이트섬의 일본군 위안소」, 『역사문제연구』 26(2), 역사문제연구소, 2022.
- _____, 「진중일지 속의 부대 운용과 일본군 위안소 제도」, 『동북아역사논총』 64, 동북아역사재단, 2019.
- _____, 「일본군'위안부'의 동원 체계」, 『성곡논총』 32(1), 성곡언론문화재단, 2001.
- 한혜인, 「총동원체제하 직업소개령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 -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차별적 제도운영을 중심으로」, 『사람(성대사람)』 46, 수선사학회, 2013.
- 황선익, 「해방 후 중국 上海지역 일본군 '위안부'의 집단수용과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 _____, 「일제강점기 대만지역 한인사회와 강제연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5.
- 황영원, 「근대 중국 사회의 '위안부' 제도 인식과 서사」, 『사람(성대사람)』 78, 수선사학회, 2021.
- Kyu-hyun Jo, 「For the Sake of Providing Comfort to All Imperial Soldiers Progressing on Every Front - An Analysis of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Japanese Panopticon Over Comfort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8(1),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23.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계보학 : 사회학의 지평

김명희·박재홍(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1. 들어가며

- 이 글은 최근 1990년대에서 2025년 8월 현재까지 사회학 분야에서 발표된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동향과 쟁점, 학문적 성과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등의 검색어로 <학술논문>, <학위논문>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구주제와 동향에 대한 문헌 검토를 진행하였다. 자료는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디비피아, KISS, RISS, 구글 스칼라, 교보 스콜라, 사이언스 온, KCI 등에서 수집하였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시작된 원년을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집이 출간된 1993년으로 상정한다면, 거의 30여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여성학·사회학·역사학·법학·정치학·문학·문화연구 등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일본군'위안부'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메타적 검토는 아직 없다.¹⁾ 주지하듯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체는 탈식민·탈냉전의 시공간에 자리한 역사 문제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이며, 따라서 진실·정의·배상 등을 둘러싼 사법적 차원의 쟁점과 첨예한 인식론적·방법론적 쟁점을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학술적 연구는 처음부터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성격을 띠었고, 그 자체가 진실과 책임의 규명, 증언과 기록, 피해회복과 기념/재현의 문제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운동의 일부로 태동했다.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일본군'위안부' 연구는 이론과 실천, 학문과 사회의 부단한 상호작용과 변증법적 대화를 통해 주제영역과 방법론의 지평을 확장해 왔고, 전통적인 실증주의 학문관의 규범들을 이탈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 하지만 실증주의 패러다임을 이탈한다고 해서 반대로 일본군'위안부' 연구가 해석(주의)적인 접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다. 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

1)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일본군 '위안부' 국내연구의 현황을 분석한 라미경(2022)의 연구가 있지만, 단어들의 추이와 기술적 분석에 멈출 뿐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주제 영역과 방법론, 그 변화와 동학에 대한 내용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체가 일제강점기 전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인(denial)을 장착한 역사 부인 문제이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집합적 실천의 일환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 그렇기에 역사적 진실의 규명과 정의(justice) 수립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어떤 점에서) 궁극적인 목표이며, 학술연구를 추동해온 동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1990년대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한국에서 전개된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성과와 담보 지점을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동향과 방향을 전망하고 이론적·방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³⁾

- 미리 밝혀두자면 사회학 분야로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검토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다분히 인위적인 것이며, 이는 보다 큰 종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분석적 단계일 뿐이다.⁴⁾ 그럼에도 검토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분석의 구체성⁵⁾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학문분과와 공명·교차하는 쟁점들을 추출하고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흐름과 동향: 사회학의 지평

- 이 글이 주로 검토한 사회학 분야의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의 연대기별 추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이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1)일제강점기 일본 군부에 의해 수십만 명의 전시 성노예 피해자를 낳은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일 뿐이 아니라 2) 역사적 진실과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끊임없이 부정되고 있는 역사 부인(denial) 문제로 정의한 바 있다(김명희, 2022: 232; 2025: 13).

3) 엄밀히 말해 일본군'위안부' 연구는 이행기 정의 연구와 젠더 연구, 포스트 식민성 연구를 아우르는 초학제적 연구 분야이며 기존의 학제에 포섭되지 않는 신생 연구분야다. 따라서 그 지속과 재생산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아울러 살피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는 학술서(도서)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 다학문간 협업에 기초한 편서로 발간되었고, 고찰의 범위가 방대해질 수 있기에 이 글의 고찰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하였다.

4) 여기서 '사회학'의 범위는 1) 연구자의 학위논문상 분과학문 배경이 사회학인 경우 2) 타분과학문의 배경을 갖고 있더라도 사회학의 이론적 자원이나 관점을 논문 제목이나 핵심 논지로 삼은 경우를 아우른다(강선미·야마시타 영애, 1993; 박재원, 2017; 마승혜, 2023; 최정, 2023 등). 또한 대부분의 일본군'위안부' 연구자들이 젠더 관점이나 페미니스트 입장을 견지하기에 사회학과 여성학의 경계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하나의 연구 관점으로서 여성학/젠더학 지평의 연구사 고찰은 이 글에 주어진 과제를 넘어서는 일이라 판단하기에 분석의 범위를 사회학 분야로 제한하였다. 다만 그 역사나 인적 구성에서 사회학과 융합적 성격이 강한 -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여성학 전공이나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의 경우처럼 사회학과 여성학의 경계에 걸쳐 있는 - 학위논문의 경우, 고찰 대상에 포함하였다(김선화, 2017; 김정화, 2020; 이재임, 2021; 손선희, 2024; 2025).

5) 원래 내용적 충만을 가리키는 구체적(konkret)이라는 독일어는 라틴어 *concretere*에서 유래하여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공생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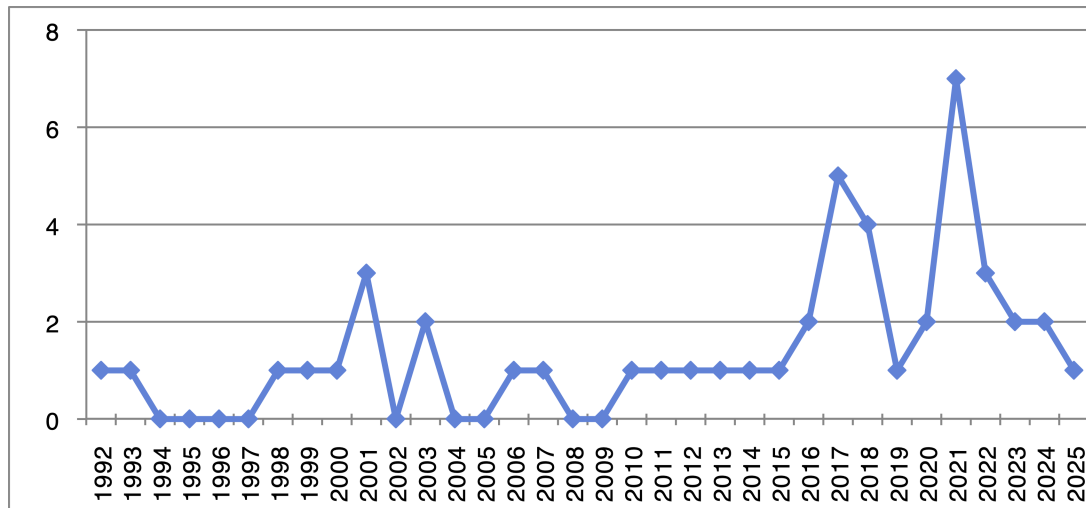
6) 이민아(1998, 지도교수 김진균), 이선형(2002, 지도교수 정진성), 사카모토 치즈코(2005; 2017, 지도교수 김현미), 백재예(2016), 김선화(2017, 지도교수 양현아), 박재원(2017), 김정화(2020), 백시진

<표 1> 연대별 일본군'위안부' 연구 현황(1993-2025)

연대	학술논문	학위논문 ⁶⁾
1990년대	4	1
2000년대	9	3
2010년대	17	5
2020년대	18	3
합계	48	12

- 연도별 사회학 분야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1년 김학순의 공개 증언을 기점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지원법)이 제정 되는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제도화⁷⁾가 이루어진 1993년부터 본격적인 학술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모두 48편에 이르는 학술논문의 경우 1990년 4편, 2000년대 9편, 2010년대 17편, 2020년대의 경우 2025년 7월 현재 18편으로 꾸준히 양적 증가세를 나타낸다. 11편에 이르는 학위논문의 경우 1990년대 1편, 2000년대 3편, 2010년대 3편, 2020년대 현재 4편이며, 그 중 박사학위논문은 2편에 불과하다. 연도별 학술논문 동향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도별 학술논문 동향



(2021, 지도교수 이나영), 이재임(2021, 지도교수 추지현), 장소정(2023, 지도교수 이나영), 손선희(2024, 지도교수 안숙영)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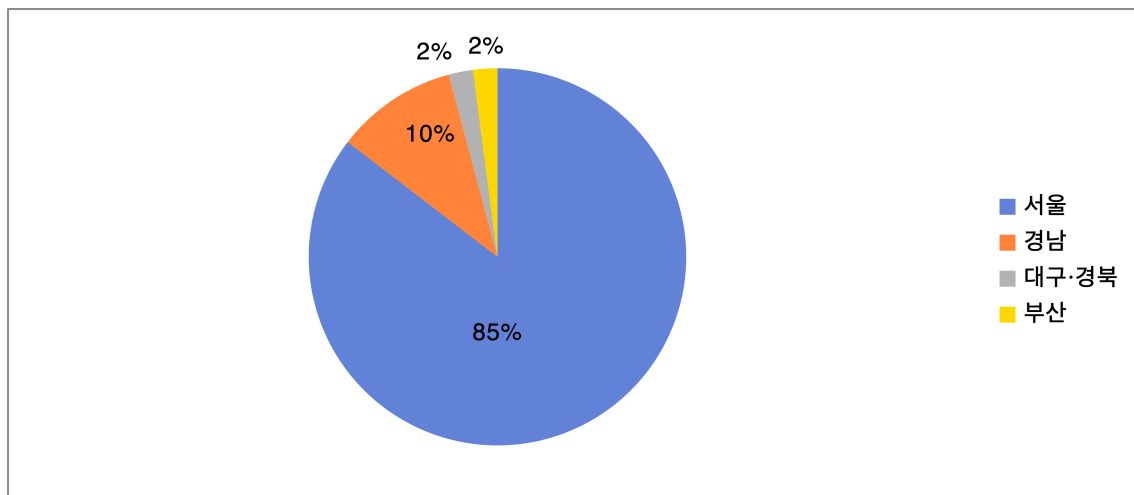
- 7)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소송 제소 활동, 여성 운동, 언론, 여성주의 담론 형성 등의 영향과 압력으로 1993년 위안부피해자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가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소위 '위안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고 심의를 한 후 이들 여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재정 지원을 시작했다(심영희, 2000: 137).

- 학술논문을 기준으로 일본군'위안부' 연구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학의 경우 비교적 논자들이 한정되어 있으며, 자료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 지역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학술 담론이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학위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성 연구자가 소속된 수도권 대학 - 주로 사회학과·여성학 협동과정(서울대·중앙대 등) - 을 중심으로 꾸준히 명맥을 이어 가는 특징을 보인다. 예외적인 경우가 남해 출신 피해자 박숙이의 생애사를 석사학위논문으로 다룬 경상국립대학교육대학원 김정화(2020)의 연구와 계명대 정책대학원 여성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손선희(2024)의 “포스트생존자 시대를 위한 일본군 '위안부' 연구: 대구·경북지역 자원활동가를 중심으로”일 것이다. 지역별 학술·학위논문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지역별 학술·학위논문 분포(1991-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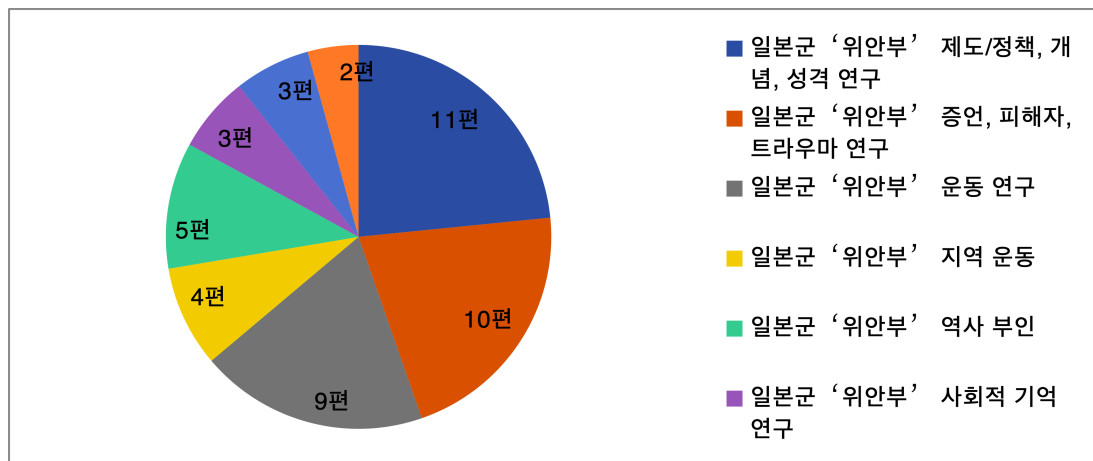
지역	학술논문	학위논문
서울	41	10
경남	5	1
대구·경북	1	1
부산	1	0
합계	48	12

<그림 2> 지역별 학술논문 분포



- 연구주제별로 학술논문의 발전 동향을 살펴보면, 48편의 학술논문 가운데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실상 및 일본군부 정책, 개념 및 성격을 고찰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가 11편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강선이·야마시타 영애, 1993; 정진성, 1994; 1998; 1999; 2003a; 2003b; 2007; 후루시아 아야, 2017; 이나영, 2018; 백재예, 2017; 양현아, 2021). 이 가운데 상당수가(8편) 비교적 운동 초창기인 1993~2003년도에 생산되었으며, 문헌 및 보고서 등을 활용한 역사사회학적·사회사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 다음으로 학술논문 48편 가운데 일본군‘위안부’ 운동에 대한 연구가 13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성격 및 이론적 관점을 논한 연구가 3편(이나영, 2010; 문소정, 2012; 조경희, 2020), 아시아연대회의 및 2000년 법정 등 국제연대의 차원과 그 함의를 조명한 연구가 8편으로 가장 많았고(심영희, 2021; 이나영, 2010; 2017; 2021; 문소정, 2011; 2012; 2014; 2015)⁸⁾, 부산 및 경남 등 지역에 기반한 운동사 연구로 그 주제 영역이 넓혀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지역 피해자 및 활동가들의 구술생애사를 새롭게 수집·활용하는 등 자료와 방법에 있어서도 확장과 다변화의 추이를 보여준다(문소정, 2021; 김명희, 2022; 2025; 문경희·유현미, 2024; 손선희, 2025).

<그림 3> 주제별 학술 논문 동향



8) 물론 각각의 범주화의 경계가 명료한 것만은 아니며, 각 주제 영역은 중첩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양현아(2021)의 연구는 2000년 법정의 성과와 한계를 젠더법학 혹은 법여성학의 관점에서 성찰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성격이 포스트식민성에 있음을 밝히고 ‘식민지성에 기초한 전시 성폭력’으로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재개념화를 제안한다. 따라서 이 연구를 일본군‘위안부’ 제도 및 성격에 관한 연구로 분류했지만, 제도연구와 운동연구를 넘나든다. 마찬가지로 김명희(2025)의 연구는 경남 역사관의 사례를 통해 경남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성과와 담보지점을 살피는 동시에 지역 수준에서 작동하는 제도적 부인의 작동방식을 부인의 정치의 새로운 국면으로 의제화한다는 점에서 부인 연구로 분류했지만, 운동 연구와 부인 연구 어느 한쪽으로 환원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 무엇보다 1991년부터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들』 1-7집의 출간 성과에 힘입어 제출된 10편의 증언 및 구술생애사 연구는 성노예 피해자 연구는 물론 운동사적 측면에서도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보여주기에 별도의 지면을 할애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2013년 ‘제국의 위안부 사태’와 2015년 ‘2015 합의’ 이후 전면화된 양상을 보이는 일본군‘위안부’ 역사 부인 문제에 대한 연구(김명희, 2017; 2025; 강성현, 2021; 백시진, 2021; 조경희, 2021; 이나영, 2022), 2011년 이후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단체의 주요 실천 전략이었던 기림비 건립 등을 둘러싼 사회적 기억 공간(박물관, 평화비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진전된 바 있다(문소정, 2017; 김명희, 2018a; 2018b). 나아가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문화적 재현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의 이론 자원을 활용한 다큐멘터리, 번역, 연극작품 분석 등 여러 장르와 학문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김한상, 2021; 마승혜, 2023; 최정, 2023). 이 밖에도 해외 지역(일본, 북한) 문헌 및 문학 작품을 활용해 해당 사회의 사회상과 지역 연대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사회사적 지역 연구도 제출되고 있다(문소정, 2019; 김성경, 2024). 이상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주제별 학술논문 분포

연번	주제	편수	
1	일본군‘위안부’ 제도/정책, 개념, 성격 연구	11	
2	일본군‘위안부’ 증언, 피해자, 트라우마 연구	10	
3	일본군‘위안부’ 운동 연구(인식론/국제연대/2000년 법정)	9	14
	일본군‘위안부’ 지역 운동 연구	5	
4	일본군‘위안부’ 역사 부인 연구	5	
5	일본군‘위안부’ 사회적 기억 연구(박물관, 평화비)	3	
6	일본군‘위안부’의 문화적 재현(다큐멘터리, 번역, 연극)	3	
7	기타: 일본군‘위안부’ 해외 지역 연구	2	
	합계	48	

3. 쟁점과 성과

- 이상의 대략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쟁점별 학문적 성과를 살피자면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문제 및 운동의 성격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1년 김학순의 증언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일본군'위안부' 연구가 본격화된 이래로 일본 정부 및 사회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일본군 '위안부'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사죄하기보다는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해 왔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외교적 이슈로 여겨져 왔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을 중심으로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실천적인 사회운동의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연구의 측면에서는 여성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증언을 채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가지는 중층적 성격으로 인해 이들 분야의 연구들은 때로는 시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김미정, 2007: 113).
- 이러한 차이는 1993년 발표된 강선미·야마시타 영애(1993)의 논문과 이에 대한 논평 형식으로 같은 저널에 게재된 안진(1993)의 글에서 두드러진다. 강선미·야마시타 영애(1993)는 “천황제 국가와 성폭력: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성학적 시론”에서 일본 측의 공식 자료를 토대로 일본 천황제 국가의 가족법, 공창제 등 성통제전략을 살피고, 1940년대 전후 '군위안부의 성격'이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인권 개념”보다 “여성 해방의 실천적 이해관심에서 제기된 사회적·윤리적·정치적 과제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다.⁹⁾
- 이에 대한 논평에서 안진은 중일전쟁 이후 위안부 정책은 공창제의 군대활용이나 매매음이 아니라 군대 내에서 집단강간의 제도화된 형태라는 견해를 전개한다. 매매춘이나 강간이나 하는 문제는 강제연행된 위안부 즉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피지배 여성에서 군위안부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에, 성모순 뿐만 아니라 민족적 차별과 민족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안진은 위안부 문제란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서 특수한 국면적 사건이기 때문에 위안부 성격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식자료에 의한 위로부터의 접근이 위안부의 동원과정과 위안소의 설치, 운영 등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접근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안진,

9) 강선미·야마시타 영애(1993)의 논문을 사회학 분야의 연구로 분류한 이유는 여성학적 관점을 강조하는 제목/논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평화사회학자로 분류되는 갈통의 폭력의 삼각형(삼층) 모델을 가져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직접적 폭력이 전반적인 구조적, 문화적 폭력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표출되는 것이며, 그 관계구조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다(강선미, 야마시타 영애, 1993: 60).

1993: 203-205).¹⁰⁾

- 이렇듯,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응축된 계급적·젠더적·민족적 모순의 중층성을 둘러싸고 여성 문제와 민족 문제를 대립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여러 개념 및 이론적 패러다임을 도입한 후속 연구를 촉발하는 배경이 된다. 또한 운동 초기 논의에서 나타난 민족과 젠더의 사이의 긴장은 이후 일본의 외교적 대응의 과정에서 반복되고 확장되었다. 우에노 치즈코의 비판이 내재한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책임 회피 가능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재비판이나, 탈식민 맥락에서 민족주의의 성격과 활용이 다변화된 것에 주목하여 등장한 저항적 민족주의(정진성, 1999: 41-42)라는 개념을 통해 그 긴장의 국면들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정진성(1999)은 일본군‘위안부’ 운동에서 민족주의와 여성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분석 아래 민족주의적 여성주의의 기여가 상당했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다(김성경, 2024: 9). 또한 그녀는 다양한 역사 문헌 및 국제 문헌 자료에 기반해 실재했던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역사성과 강제성¹¹⁾을 드러내는 사회사적 연구를 통해 일본군‘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크나큰 기여를 했다(정진성, 1994; 1998; 2003; 2007).
-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이같은 이론적 긴장은 피해 생존자들의 구술 증언 분석에 기초해 양현아(2001)가 포스트 식민주의¹²⁾를 제시하면서, 일정 정도 해소되고 합의의 지점을 형성한 측면이 있다(이나영, 2010; 후루하시 아이, 2017; 조경희, 2020; 양현아, 2021 참고). 이후에도 배봉기의 생애사에 대한 조명과 해석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장기 지속을 설명하는 이론적 프레임으로 포스트 식민 냉전 체제(김현경, 2021)를 제안하거나, 아시아연대회의 및 정대협 및 피해생존자들의 국제연대 활동을 조명해 초국적 페미니즘 혹은 글로벌 페미니즘(문소정, 2012; 이나영, 2018)으로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역동성과 확장성을 (재)조명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개념들이 일본군성노예제의 성격과 지속을 설명하는 포스트 식민주의의 관점과 모순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아이리스 영(Isis Marion Young) 등

10) 민족모순과 계급모순 뿐만 아니라 성모순을 강조하는 연구방법은 특정한 역사적 현상을 남성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성적 착취와 국면적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구체적 연구와 다양한 매개변수들을 개발하지 않고 국가의 정책들만 강조할 경우 모든 성모순을 가부장적 국가권력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동어반복(tautogy)과 성중심적인 사고의 오류를 자칫 범하기 쉽다는 것이다(안진, 1993: 205).

11)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둘러싸고 중요한 쟁점이 되어온 것이 ‘강제성’ 논의다. 2007년 아베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 “관헌이 집에 침입하여 유괴범처럼 데리고 가는 이른바 협박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답변한 이후 다시 한 번 촉발되었다. 이러한 발언은 정진성(2007)이 생존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례를 다룬 자료 발굴하여 반박한 것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한일 연구자들이 반박하였다(백제예, 2018: 190)

12) 포스트 식민주의 혹은 포스트 식민지성(postcoloniality)이란 식민지피지배 ‘이후,’ 식민지성의 ‘지속,’ 그리고 변형·재생산과 같은 다의적 의미를 지니는 구조주의적 개념이다(양현아, 2016: 19).

의 정치철학을 차용해 페미니스트 정의론(이나영, 2018)이나 이행기 젠더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성과 실천 과제를 포착하고 재맥락화하려는 시도 또한 이어지고 있다(김명희, 2022; 2025; 백재예, 2016; 이재임, 2021).

- 주지할 것은 이러한 개념화/재개념화의 시도는 연구 공동체 내부만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국내적·국제적 실천 및 정치적 사건과 상황의 변화와 끊임없이 교호 작용하며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이론적 혁신과 주제 영역, 방법론의 확장에 작용한 몇 계기를 살펴보면 1) 새로운 자료의 발굴 2) 글로벌 페미니즘의 성장 및 국제인권규범의 발전 3)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및 한국의 외교 정책과 국내외 담론의 변화 등이 민감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탈식민의 문제이자 보편적인 여성인권 문제의 복합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형성에는 1993-2000년 국제인권규범의 발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 1993년 빈 세계인권대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보편적 인권 문제로 규정한 것에 이어 1993년 UN은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선언하고, 1995년 제4차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이는 정대협 및 피해자들의 꾸준한 문제제기와 국제적 노력의 결실인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성폭력과 여성인권의 문제로 재정의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이나영, 2021: 103-104).¹³⁾ 그 결과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각종 보고서, 권고, 결의안 등이 채택되었다.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의 보고서와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 ‘전시 성노예제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갈(Gay J. McDougall) 등이 대표적이다(정진성, 2001: 37-38; 이나영, 2021: 106-107).¹⁴⁾ 특히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적 구속력을 갖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2000 for the Trial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이하 2000년 국제법정)은 식민지 여성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하는 국제규범으로 끌고 갔다는 점, 남북한과 재일조선인 여성, 아시아 여성들의 오랜 연대와 활동이 그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여성인권사에 커다

13) 이나영에 따르면 피해당사자들은 1992년부터 유엔 등 국제기구에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고 증언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시작했다. 1992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소위원회에는 황금주가 당사자로서는 최초로 ‘위안부’ 피해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렸으며, 1993년 5월에는 유엔인권소위원회 산하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 강덕경이 참석했다. 1993년 6월 비엔나 인권대회에는 북한 쪽의 장수 월과 남측의 김복동이 직접 참가하고 만나기도 했으며,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는 정서운이 직접 증언에 나서 세계 여성들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이나영, 2018).

14) 한편 전시성폭력은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특수’ 문제라는 이분법적 틀 또한 ‘2000년 법정’의 한계라기보다 국제법의 현재적 한계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이나영(2021: 128)의 견해를 참고.

란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심영희, 2001: 161; 이나영, 2021: 130-132). 이에 그치지 않고 2000년 법정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식민주의 관점의 재고찰을 통해 양현아(2021)는 '젠더에 기초한 폭력'(Violence based on Gender)'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민지성에 기초한 젠더폭력(Gender Violence based on Coloniality)' 개념으로 일본군 성노예제를 바라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2) 일본군'위안부' 증언 및 피해자 연구: 인식론과 방법론

- 2000년대에 이르러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역사학, 정치학, 의학, 교육학, 문화인류학 등으로 연구 분야가 확대되었다. 특히 역사학계에서는 여성부의 지원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초 문헌 자료집과 일본군 '위안부'의 국외실태조사 등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¹⁵⁾ 이에 따라 연구 자료도 연합군 문서나 국제기구의 보고서, 일본의 언론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다변화 속에서도 1993년부터 정대협을 중심으로 피해자 증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출간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시리즈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학술연구가 시작된 출발점이자 성노예 피해자 연구의 자료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비판적 피해자 연구¹⁶⁾의 새로운 줄기를 생성했다고 보인다.¹⁷⁾
- 증언 채록을 통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이 각국 운동단체의 지원으로 이름을 밝히면서 청취 조사가 진전되어 구체적이고 다양한 전시 성폭력 피해의 양상이 분명해졌다. 이 점에서 김부자가 지적하듯 ① 운동체 결성과 '운동', ② 피해자의 등장과 '증언', ③ 역사학에서 '위안부' 제도 및 공창제 '연구'가 삼위일체가 되어 진전된 것이 1990년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특징이었다(김부자, 2008: 122). 그 가운데서도 피해자들의 심층 면접과 증언집을 활용해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귀국 이후의 삶을 고찰한 심영희(2000)의 "침묵에서 증언으로"는 성노예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의 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하며, 왜 이들은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아가 이들이 증언에 나서게 된 동인은 무엇인지를 제도(위안부피해자지

15) 그러나 정본 자료집이 만들어지진 못했고 자료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여 단발적이고 이벤트성의 자료 발굴 보도가 이어질 뿐 역사적 자료의 구축은 부실한 실정이다(백제예, 2016: 5).

16) 일반 피해자학(general victimization)과 비판 피해자학(critical victimology)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해를 같이 하지만, 피해자의 특성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일반 피해자학과 달리 비판 피해자학은 여성과 아동, 빈곤층 등 특정 집단을 범죄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질문한다(Duggan, 2018).

17) 앞서 말했듯 1993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매달 월급과 일시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침묵에서 신고 및 증언으로 가게 된 것은 이들의 정체성(의식)변화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체성(의식)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정리하면 1) 정대협 활동에 의한 민족주의, 여성주의 담론 확산, 2) 위안부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원 체계 성립이 특히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심영희, 2000: 137).

원법), 담론(여성주의/민족주의의 성장), 운동(정대협 등 지원운동)의 차원을 아울러 두텁게 밝히고 있다.

- 나아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의 작업을 주도했던 양현아(2001; 2006)와 김수진(2013)의 연구는 포스트 식민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구술생애사 방법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93년 첫번째 증언집 출간에 이어 그동안 위안부 증언집 시리즈는 7권 이상 출간되었다. 이들의 증언은 성폭력 피해자가 스스로를 침묵시켜야 했던 성폭력 연설의 금기를 허물 어트렸을 뿐 아니라 여성이 다시 쓰는 식민지 역사쓰기라는 지평을 열었다(양현아, 2016: 16). 김수진(2013)의 연구가 상세히 밝히고 있듯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시리즈의 출간 과정에서 피해자 증언 채록 과정을 통해 증언이 내포하고 있는 젠더, 섹슈얼리티, 계급 등 다층적인 의미에 대한 학술적 토론이 본격화되었다. 예컨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 1-3권은 ‘위안부’ 당시 상황에 초점을 맞춰 구술한 증언을 정리하는 사건사적 구술 방식 등에 대한 방법론적 논쟁도 지속되었다.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거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 1권과 2권이 1인칭 서술 형식으로 증언의 상당 부분이 가공되었다면, 3권부터는 가능한 피해자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수록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대표적으로 2000년 국제법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피해자 60여 명의 증언을 담고 있는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권은 증언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체계를 고려한 증언집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출간된 초기 증언집이 피해 사실의 증명이라는 목적과 민족주의적 규범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면,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이후 출간된 증언집들은 피해자 증언이 내포하고 있는 다의성이나 피해자들의 경험과 해석의 다층성과 모순성 등에 주목했다는 진전이 있었다(이지영, 2022: 203-208; 김성경, 2024: 17-18).
- 이들 연구는 동일성에서 차이로, 묻기에서 듣기로의 방법론적 전환을 이끌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가능케 하는 사회관계적 조건으로서 ‘공감적 청중’의 존재를 질문하고 소환함으로써 방법론적 논의에 머물러 있던 증언/구술생애사 연구의 지평을 존재론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해 피해자에 대한 확장된 개념화를 시도하고, 재생산 폭력의 피해자인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 안팎에 자리한 집합적 피해자들의 존재와 트라우마의 동심원적 차원을 환기시킴으로써 집합적 회복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였다(양현아, 2016; 2020).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이행기 정의 관점의 피해자 연구(이재임, 2021), 성노예 피해자의 재희생자화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김명희, 2020; 2025), 문화적 트라우마와 공감된 청중(이나영, 2017; 최정, 2023), 이행기 정의의 커뮤니티스(김명희, 2018b),

평화나비 활동가들의 기억과 정동의 정치(장소정, 2023),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파장(이나영, 2022)과 피해자-활동가의 상호 거듭남의 동학(김명희, 2025) 등에 대한 후속 고찰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 연구는 성노예 피해자들의 증언 연구가 단순히 성노예 피해의 실상을 드러내고 역사를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함께-존재함과 되어감(becoming)의 과정을 수반하는 집합의식/양심의 형성과 윤리적 고양의 과정임을 드러내 보여준다.

3)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기억과 부인의 정치

- '2015년 합의'를 전후로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새로운 흐름으로 사회적 기억과 역사 부인 연구가 부상하였다. 앞서 말했듯, 일본이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과 법적 책임을 부정해 왔기에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그 태동부터 부인의 정치에 대항해 역사적·사법적·서사적·치유적 진실을 규명하고 정립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노력은 2011년 이후 기림비/역사관 건립을 위한 범시민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동학에 대한 학술적 기록도 여럿 제출된 바 있다(김명희, 2017; 2022; 문소정, 2017; 장소정, 2023). 그리고 이러한 전지구적인 기억 운동의 성장에 대한 반동(backlash)으로서 2013년 '제국의 위안부' 사태와 '2015 합의'는 기억이라는 장을 주요한 싸움터로 삼아 펼쳐지는 역사 전쟁과 부인의 정치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사태였고,¹⁸⁾ 이는 2016년 1월 19일 <일본군'위안부'연구회>를 창립하는 직접적 배경이자 발단이 되었다.¹⁹⁾
- 이러한 국면과 정세 변화는 한국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부인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학 분야의 학술논문으로 범위를 한정한다면, 박유하의 부인 담론에 대한 김명희(2017; Kim, 2017)의 연구를 위시로,²⁰⁾ 부인의 사회학을 개척한 스탠리 코언(Stanley Cohen)의 분석틀이 다양한 학문분야로 소개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램지어 사태'를 목도하면서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의 부인 담론과 논리에 대한 학술적 비판이 제출되었다(강성현, 2021; 조경희, 2021).
- 또한 아베 정권의 국회 회의록, 기자회견 및 정책 자료를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과 탈진실 정치의 작동방식을 분석한 백시진(2021), 2020년 5월 정의

18) 이 같은 '부인의 정치'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5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징대학살 부정, '위안부' 부정 등 식민지배 및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전후 역사를 수정하려는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움직임과 공명하고 있다(김부자, 2016).

19)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당일 창립총회에서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와 배상을 하고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지적 공간으로서 연구회를 발족한다"며, 2015년 12월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표현한 '제국의 위안부'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비판 서명을 했던 각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연합뉴스, 2016년 1월 29일자).

20) 이외에도 학위논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책임과 부인(denial)의 정치학"을 다룬 사카모토 치즈코(2017), 학술도서로 『탈진실 시대의 역사부정을 묻는다』(강성현, 2020) 등이 제출되었다.

연/정대협을 둘러싼 이용수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언론의 대응 방식을 분석한 이 나영(2022)의 연구도 크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부인 담론과 탈진실 정치에 대한 비판과 교정의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아카데미 부인론(academic denialism)의 양상을 변별하고, 역사관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수준에서 지자체의 행정적 처널을 통해 작동하는 부인의 작동방식을 제도적 부인(institutional denial)으로 개념화한 연구도 최근 제출된 바 있다(김명희, 2025).²¹⁾

- 역사 부인 문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당면한 심각한 도전이자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요하는 답보 지점으로서 사회학, 역사학, 법학, 여성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공통된 의제로 부상했으며, 향후에도 보다 다변화된 후속 연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²²⁾

4. 나가며: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실천성과 학제성

- 이제까지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이제까지 살펴보았듯, 일본군‘위안부’ 연구는 이론과 실천, 학문과 사회/운동의 부단한 대화를 통해 존재론과 인식론, 가치론의 차원을 분할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전해왔고, ‘학문의 자유’라는 자유주의 학문관의 허구성을 넘어 ‘학문의 책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한국사회 및 국제사회에 환기시킨 독창적인 지식운동의 측면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군‘위안부’ 연구 운동은 분과에 기반하되 분과학문의 경계에 갇히지 않는 학제적이고 집합적인 지식 생산 방식을 구현하고 실천하며, 지향해 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문사회과학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²³⁾

21) 실증주의에 입각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램지어(John Mark Ramseyer)의 문자적(전면적) 부인과 해석주의에 입각한 박유하 교수의 해석적·함축적 부인이 그것이다. 두 유형의 아카데미 부인론은 그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첫째, 부인의 수사/기법과 상관없이 “일본군 위안부=성노예”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denial)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부인 담론이 ‘학문(의 자유)’의 외피를 쓰고 전개된다는 점이다. 차이가 있다면 ‘전면적·문자적 부인’이 실증주의 법학과 경제학 분야의 훈련을 받은 학자 그룹에서 두드러진다면, ‘해석적·함축적 부인’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언어적 전회’에 기대는 학자 그룹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셋째,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 가해-피해 관계를 흐릿하게 하고, 성노예 피해자의 인권침해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는 ① 피해자의 존재와 고통/인권침해 부인, ② 가해자의 성격과 책임의 부인 ③ 일본의 법적 책임 부인 ④ 피해자 지원운동의 기여 부인 등을 통해 달성된다(김명희, 2025: 18-20).

22) 관련하여 일본 우익 NGO의 위안부 부정 운동이 미국 중심의 인권 담론에 기대어 전개되는 양상에 대한 흥미로운 고찰로 이해빈(2022) 참고.

23)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학제성은 한편으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복잡성과 중층성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를 주도한 이들의 각각의 학제적 역량에서 비롯되는 동시에(역사사회학, 법사회학/법여성학, 페미니즘 사회학 등) 운동의 초기부터 지식 생산 방식에서 장착된 것으로 별도의 지면을 할애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둘째, 나아가 양현아가 지적하듯,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법논리를 형성하고 법규정을 만들어내는 등 피해생존자를 중심으로 전개된 전지구적 법과 사회운동(a global law and society movement, 양현아, 2016: 18)이자 이행기 정의 연구와 운동의 중요한 축을 형성했다. 피해생존자들의 귀국 이후의 삶이 보여주듯 식민지성과 가부장제의 역사적 유제에서 비롯된 불평등과 차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 평시와 전시 모두에서 - 보다 용이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의 생애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서 젠더 분석은 이행기 정의가 추구하는 인권 기반 접근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포스트 식민의 역사적 시공간에서 장착된 일본군'위안부' 연구와 운동의 성과를 전지구적인 이행기 정의 연구와 실천에 보다 적극적으로 녹여내고 소통시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일본군'위안부' 연구와 운동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일본군'위안부' 연구자 지형의 지역적 편중과 협소함이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곧 세대 재생산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날 불거진 '소녀상 혐오' 등 기억을 둘러싼 역사전쟁의 새로운 싸움터가 지역이라는 삶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운동과 함께 성장해 온 지역 수준의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성과와 고민의 현재성을 끌어안는 연구의 확장과 새로운 실천 전략이 요청되는 시점이다.²⁴⁾

24) 경남 지역에서 전개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과 포스트 메모리 운동을 지역화 교과서와 사회정의 교육의 실천 사례에 접목한 연구로 박재홍(2024)을 참고하라.

참고문헌

- 강선미·야마시다 영애(1993), “천황제 국가와 성폭력: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성학적 시론”, 『한국여성학』, 제9권 1호, 52-89쪽.
- 강성현(2021), “‘램지어 사태’로 본 역사부정의 논리와 수법 비판”, 『황해문화』, 111, 238-261쪽.
- 권은선(2017),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이미지화 한다는 것의 의미: 영화 <귀향>의 성/폭력 재현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34권 1호, 3-28쪽.
- 김부자(2008), 이애숙·오미정 역, 「‘위안부’ 문제와 탈식민주의: 역사수정주의적 ‘화해’에 대한 저항」, 『역사와 책임(歴史と責任)』, 나카노 도시오 김부자(편), 선인.
- 김명희(2017),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부인(denial)의 정치학: ‘제국의 위안부’ 사태’ 다시 읽기”,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235-278쪽.
- 김명희(2018a), “일본군‘위안부’운동과 시인(recognition)의 정치: 한국의 사회적 기억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4권 3호, 113-114쪽.
- 김명희(2018b), “두 전쟁박물관과 젠더 인지적 공공역사의 가능성: 이행기 정의의 코뮤니타스”, 『젠더와 문화』 제11권 2호, 7-42쪽.
- 김명희(2022), “경남지역 일본군‘위안부’운동과 기억의 연대”, 『한국여성학』, 제38권 4호, 229-270쪽.
- 김명희(2025), “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건립과 제도적 부인: 인권 기반 접근”, 『사회와 역사』, 제146집, 11-48쪽.
- 김선화(2017),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재판과 ‘2015년 한일합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2013),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여성학논집』, 제30권 1호, 35-72쪽.
- 김성경(2024), “북조선 일본군‘위안부’ 재현의 저치: 젠더, 트랜스내셔널, 미래성의 징후들”, 『담론201』, 제27권 2호, 7-42쪽.
- 김정화(2020),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 故 박숙이 할머니 생애사 연구』,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빈(2022), 『일본 우익 NGO의 위안부 부정 운동과 미국 중심의 인권 담론 비판』,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한상(2021), “다큐멘터리의 몸짓과 영상사회학적 실험/실천: <숨결>과 <보드랍게>의 피해생존자의 경우”, 『현대영화연구』, 제17권 3호, 29-49쪽.
- 김현경(2021), “냉전과 일본군 ‘위안부’: 배봉기의 잊혀진 삶 그리고 주검을 둘러싼 경합”, 『한국여성학』, 제37권 2호, 203-236쪽.
- 라미경(2022), “일본군 ‘위안부’ 국내연구의 현황 분석과 과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제21권 1호, 9-36쪽.
- 데이글, 레아(Daigle, Leah), 2022, 『피해자학』. 이민식 역. 박영사.
- 마승혜(2023), “‘번역사회학적 작품분석을 바탕으로 ‘위안부’에 대한 초국적 이해 모색 - 증언소설 『한 명』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24권 1호, 193-220쪽.
- 문소정(2011), “동아시아 여성평화운동과 일본 여성의 횡단정치학”, 『사회와역사』, 제89호, 305-335쪽.

- 문소정(2012), “일본여성운동의 초국적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사회와역사』, 제95호, 315-345쪽.
- 문소정(2014),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글로벌 페미니즘의 정치학: 『아시아연대회의』의 일본여성운동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1권 39쪽, 477-492쪽.
- 문소정(2015),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통일과평화』, 제7권 2호, 213-246쪽.
- 문소정(2017), “행동하는 자료관 『WAM』과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정치학”, 『동북아문화연구』, 제1권 50호, 385-400쪽.
- 문소정(2019), “히라츠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의 섹슈얼리티 담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동북아문화연구』, 제1권 61호, 345-360쪽.
- 문경희(2018), “호주 한인들의 '소녀상' 건립과 일본군 '위안부'운동: '코스모폴리탄' 기억형성과 한인의 초국적 민족주의 발현”, 『페미니즘연구』, 제18권 1호, 47-92쪽.
- 문경희·이현미(2024), “지역성 재구성의 장으로서 일본군'위안부' 운동: 마산·창원·진해 지역의 시민연대와 기억의 정치”, 『한국민족문화』, 제89호, 165-208쪽.
- 박재원(2017), 『집단기억의 정치사회학: 일본군'위안부' 피해기억, 배제에서 확산으로』,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재홍(2024), “탈진실시대 전쟁범죄와 사회정의 교육: 경남의 '지역화 교과서'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2024년 후기사회학대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4.12.20.).
- 백시진(2021a), 『일본의 '화해' 담론 연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백시진(2021b),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탈진실 정치: 아베 정권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71호, 307-352쪽.
- 백재예(2016),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연합국의 일본군 '위안부' 인식에 관한 연구: ATIS, NEFIS 심문 보고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백재예(2017), “체계적으로 관리된 성폭력, 일본군 '위안부' 제도 - 연합군번역통역부(ATIS) 심문 보고”, 『사회와역사』, 제114호, 175-203쪽.
- 사카모토 치즈코(2005), 『전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증언'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사카모토 치즈코(2017),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책임과 부인(denial)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손선희(2025), 『포스트생존자 시대를 위한 일본군 '위안부' 연구 - 대구·경북지역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여성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손선희(2025), “일본군'위안부'운동 다시 쓰기: 대구경북 지역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41권 1호, 159-194쪽.
- 심영희(2000), “침묵에서 증언으로: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귀국 이후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학』, 제23권 2호, 115-146쪽.
- 심영희(2001), “2000년법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참관기”, 『여성과 사회』, 제12호, 145-163쪽.
- 안진(1993), “천황제 국가와 성폭력: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성학적 시론”에 대하여”, 『한국여성학』, 제9권 1호, 202-207쪽.
- 양현아(2001), “증언과 역사쓰기 -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역사』, 제60권,

60-98쪽.

- 양현아(2006), “증언을 통해 본 한국인 '군위안부'들의 포스트식민의 상흔(Trauma)”,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133-167쪽.
- 양현아(2016),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그 내용과 절차”, 『민주법학』, 제60호, 13-44쪽.
- 양현아(2020), “일본군 성노예제에서 자행된 재생산폭력의 고찰: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기초하여”, 『법과사회』, 65, 33-70쪽. 69-123쪽.
- 양현아(2021),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민주법학』, 제75호, 69-123쪽.
- 연합뉴스(2016), “국내외 학자 56명 모여 '일본군위안부연구회' 발족”, 2016년 1월 19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60129140700004>(2025.8.10 최종검색).
- 이나영(2010), “일본군 '위안부' 운동: 포스트/식민국가의 역사적 현재성”, 『아세아연구』, 제141호, 41-78쪽.
- 이나영(2016), “페미니스트 인식론과 구술사의 정치학: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50권 5호, 1-40쪽.
- 이나영(2017), “일본군 '위안부' 운동 다시 보기- 문화적 트라우마 극복과 공감된 청중의 확산”, 『사회와역사』, 제115호, 65-103쪽.
- 이나영(2018a), “경계에서 출발해 경계를 넘어: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초국적 연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제9권 2호, 191-230쪽.
- 이나영(2018b), “페미니스트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의미와 과제”, 『젠더와문화』, 제11권 2호, 125-156쪽.
- 이나영(2021),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가해자 책임 귀속을 위한 여정”, 『기억과전망』, 제44호, 97-137쪽.
- 이나영(2022a), “김학순 공개증언과 일본의 시민운동: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만들어낸 파장(波長)”, 『젠더와문화』, 제15권 1호, 109-145쪽.
- 이나영(2022b), “역사적 반동과 탈진실의 시대, '듣는다'는 것의 의미: 2020년 5월 '이용수의 말'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 제22권 1호, 155-194쪽.
- 이민아(1998), 『사회운동조직간의 연대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선형(2002),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증언의 방법론적 고찰: 증언의 텍스트화와 의미부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 이재임(2021),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피해자의 의미: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 이채원(2020),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페미니즘과 내셔널리즘의 역학관계 - 트랜스내셔널 페미니즘의 구축과 한일 여성 연대 가능성”, 『아시아여성연구』, 제59권 1호, 125-165쪽.
- 장소정(2023), 『일본군'위안부'운동을 둘러싼 기억과 정동의 배치 : 평화나비 활동가 경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진성(1994), “일본 군위안부 정책의 본질”, 『사회와역사』, 제44권, 172-201쪽.
- 정진성(1998), “억압된 여성의 주체 형성과 군 위안부 동원”, 『사회와역사』, 제54권, 77-95쪽.
- 정진성(1999), “민족 및 민족주의에 관한 한국여성학의 논의”, 『한국여성학』, 제15권 2호, 29-53쪽.

- 정진성(2001), “군 위안부/정신대의 개념에 관한 고찰”, 『사회와역사』, 제60권, 34-61쪽.
- 정진성(2003a), “전시 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39-61쪽.
- 정진성(2003b), “일제 말 강제 동원기의 기업 위안부에 관한 연구”, 『사회와역사』, 제63호, 196-227쪽.
- 정진성(2007), “미하원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 논의과정에서 제기된"협정의 강제성"과 그역사적 진실”, 『사회와역사』, 제76호, 399-420쪽.
- 이혜숙(2013),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지역여성운동: 경남지역 활동을 중심으로”, 김동노 외, 『한국사회의 사회운동』, 다산출판사, 123-151쪽.
- 조경희(2020), “포스트식민 페미니즘의 (재)소환: 1990년대 재일여성들의 ‘위안부’ 운동과 정체성 정치”, 『문화과학』, 통권 제104호, 114-134쪽.
- 조경희(2021), “마크 램지어의 역사부정과 소수자 혐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재일조선인, 부라쿠민 서술 비판”, 『여성과역사』 제34권, 85-121쪽.
- 최정(2023), “문화적 외상의 극복과 기억의 윤리: 이해성의 “빨간시”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5권 12호, 349-362쪽.
- 후루하시 아이(2017), “포스트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 2014년 일본 신문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3권 1호, 267-304쪽.

재현-비재현 너머 : 일본군'위안부' 문학을 중심으로

장수희(동아대학교)

1. 입장들

며칠 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부산의 영사관 앞 '항일거리'에서 일본군'위안부' 기림일과 관련된 캠페인에 참가하였다.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그림을 전시하기도 하고,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이 김학순이 처음 증언했던 8월 14일이라는 것도 알리고, 평화의 비 옆에서 노래를 틀거나 한명씩 관련 책을 낭독하는 퍼포먼스도 했다. 피켓을 들고 있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학생 두명이 다가와서 "위안부가 뭐예요?"라고 물었다. 조금 놀랐다. 왜냐하면, 이런 장소에서 "위안부"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을 처음 대면했기 때문이다. 나는 반문했다. "네? 위안부를 모른다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세계2차대전 때...'로 시작하는 간략한 설명을 한 뒤, 1인시위밖에 허용이 되지 않아 활동가 한명이 일본군'위안부' 관련 책을 낭독하고 있는 곳을 가리키며, '저기에 일본군'위안부'를 기리는 소녀상이 있으니 한번 가보세요'라고 안내했다. 두 학생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

어떤 할아버지도 캠페인을 하고 있는 우리 앞을 지나갔다. 우리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면 할아버지들이 '너희 민주당이제?!'라며 잔소리 한바탕을 하고 갔던 적이 있어서 지나가는 그 할아버지에게 서명을 해달라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옆으로 쓰윽 지나간 할아버지는 우리가 들고 있는 피켓을 입으로 크게 또박또박 읽더니 "흥, 나한테는 서명해달라고 안하고!" 이래서, 아니 관심 없으신줄 알았다고, 오늘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이라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서명지에도 서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흥, 그럼 하지 뭐." 하고 서명하고 가셨다.

이 두가지 에피소드에 여러가지 입장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얘기해보고 싶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가 뭔지 모르는 입장, 일본군'위안부'가 '무엇인가'라고 물어오는 입장이다. 세계2차대전,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용어도 너무 먼 시간과 공간으로 감각하거나 잘 상상이 안되는 입장이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고, 잘 모르지만 목소리를 내고 말을 걸어 오는 사람에게 동참해야지 하는 입장도 있다.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에 대해서 알리고, 증언을 입으로 읽어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영사관 앞 일

본군'위안부' 평화비가 한일관계의 걸림돌이라며 말하며 싸움을 걸어오는 술취한 젊은 남자의 입장도 있었다. 평화비 주위에 흰스를 치고, 영사관 앞을 지키고 있는 경찰들, 그리고 문이 닫힌 채 우뚝 서 있는 일본 영사관도 있었다. 그냥 재빨리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별 말씀 하지 않았지만 단체 사진 찍을 때 사진을 찍어줬던 아주머니도 있었다. 차도로 계속해서 평화비를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있었고, 내리찍는 땀별을 피해 피켓을 들고 왔다갔다 하는 그날 캠페인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 모든 입장들이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일본군'위안부'라는 존재를 둘러싼 이렇게 많은 입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문학에 대한 논의는 일본군'위안부'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비판이 주를 이루어 왔다. 윤리적이고 좋은 재현과 틀리거나 선정적인 나쁜 재현이라는 틀 속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작품도 이분화되어 버린다. 재현 비판의 흔들림 없는 틀이 구체적인 수많은 텍스트를 양분화 하거나 창작자에게 부담을 지운다. 생산된 문학텍스트가 어떤 장소와 시간, 어떤 입장과 관계를 맺으며 해석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일본군'위안부' 연구에서 어떤 의미일까를 이 발표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2. 목록과 아카이브

일본군'위안부'를 다룬 문학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오랫동안 '재현'을 둘러싸고 논의되어 왔다. 어떤 작품이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드러내고 있는지, 역사적 사실이나 배경이 옳은지 그른지, 혹은 왜곡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논의는 일본군'위안부' 문학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했다. "일본군'위안부'가 뭐예요?"라는 질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정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일본군'위안부' 문학이 기능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문학을 재현의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환원되는 흐름도 낳았다.

아카이브는 보존과 소거의 정치가 교차하는 장이자, 재현과 비재현의 경계가 끊임없이 교섭되는 장소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 아카이브적 층위 속에서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선씨였다』를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문학이 피해경험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차원을 넘어 불가능성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기억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방식을 밝힐 수 있을지 시도해 보고자 한다.

<표 1> 1980년대 일본군‘위안부’ 관련 소설

저자	제목	출전	출판연도
김성중	여명의 눈동자	일간스포츠	1975-1981
하근찬	산에들에	현대문학	81-83년 연재
윤정모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인문당	1982
조갑상	살아 있는 사람들	소설문학	1984.4
김학철	걱정시대	료녕민속출판사	1986

위의 표는 1975년부터 81년까지 연재된 『여명의 눈동자』부터 80년대 간행되었던 소설들의 목록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일본군‘위안부’ 서사 속에서 일본군‘위안부’는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가 되지 못했다. 일본군‘위안부’가 되기 전과 위안소에서 경험, 해방 이후의 삶이 제각각 분절적으로 서사화 되었기 때문이다.²⁵⁾ 이것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화 되는 것이 김성중의 『여명의 눈동자』와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전후와 한국전쟁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일본군‘위안부’였던 인물의 삶이 그려지는 것이 『여명의 눈동자』라면, 전쟁과 전쟁 이후를 살아온 삶의 경험을 일본군‘위안부’였던 여성인물의 입을 통해 말하는 소설이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이다. 직접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설정이 이 시기부터 등장한 것은 의미있는 지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원작으로하여 영화 <여자정신대>(1985)와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Your Ma's Name Was Chosun Whore)>(1991)이 만들어지고 이들은 오랫동안 논의할 가치가 없는 ‘나쁜 재현’으로서 회자되어 왔다. 이런 지적은 이들이 ‘좋은 재현’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재판관 같은 비평이 이후의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당대의 ‘한계’로서만 일관되는 근거로 활용됨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에 ‘완벽한 재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아직 도달하지 못하거나, 찾아내지 못한 것처럼 논의된다.

1992년에는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조선사 세미나’와 ‘조선어 강좌’를 진행해온 기독교 단체인 고베학생청년센터에서 『에미이름은 조센삐였다(母・従軍慰安婦 - かあさんは「朝鮮ビ」)』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독일에서는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Meine Mutter war eine "Korea-Nutte")』가 1995년 번역 출간되었다.

영화로의 제작되면서 만들어진 영어 제목, 일본어로 번역되면서 만들어진 일본어

25) 장수희, 「단절과 고립의 냉전서사로서의 일본군‘위안부’ 서사 연구」, 『감성연구』 Vol.- No.22, 2021 참조.

제목,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된 독일어 제목을 비교해 보면 각자 번역한 시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제목	의미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	—
영화의 영어 제목	Your Ma's Name Was Chosun Whore	내 어머니 이름은 조선 매춘부였다.
독일어 번역본	Meine Mutter war eine "Korea-Nutte"	내 어머니는 “코리아 매춘부”였다.
일본어 번역본	母・従軍慰安婦 - かあさんは「朝鮮ピ」と呼ばれた	어머니・종군위안부-어머니는 ‘조센삐’라고 불렸다

영어 제목 <Your Ma's Name Was Chosun Whore>는 ‘너의 어머니’라는 타자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1982년 인문당에서 발간된 단행본 『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²⁶⁾라는 제목의 직역으로 보인다. 독일어 번역본 Meine Mutter war eine “Korea-Nutte”는 ‘나의 어머니’라는 자식의 시선을 반영한다. 일본어 번역본 『母・従軍慰安婦 - かあさんは「朝鮮ピ」と呼ばれた』는 ‘어머니’라는 비교적 중립적 호칭을 택했다. 반면 한국어 원제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에미’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여성 화자의 발화이다. 따라서 원제는 여성 주체가 자신의 삶을 ‘어머니’의 입장에서 직접 서술하는 자기지시적 성격을 가지지만, 외국어 번역 제목들은 모두 타자의 시선에서 ‘어머니’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나’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삶을 서술하고 있는 이 소설과 소설의 제목은 역시 그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너의 어머니로, 나의 어머니로, 일반화된 어머니로 분열된다. 물론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뉘앙스를 온전히 살리기 어려운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번역자가 작품의 의미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서술 시점의 전환을 수반하게 만든다. 그러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라는 제목 번역의 경우, 이러한 번역상의 불가피한 차이가 단순한 언어적 변형에 그치지 않고, 원제가 지닌 핵심적인 질문—즉, ‘누가 말하는가?’라는 문제—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지점이 된다. 한국어 원제 속 ‘에미’라는 표현은 단순한 어머니 호칭을 넘어, 스스로를 지칭하는 여성 화자의 자기 발화를 가능케 하는 언어이다. 이 발화는 피해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자기 존재를 직접 불러내는 순간이며,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을 호명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제목이 번역되는 순간, ‘에미’라는 자기 지칭은 ‘너의 어머니’, ‘나의 어머

26) 이지은, 「민족주의적 ‘위안부’ 담론의 구성과 작동 방식」, 『여성문학연구』 vol., no.47, 2019, 384쪽 각주 7번 참조.

니’, 그리고 보편화된 ‘어머니’로 전환된다. 이는 곧 자기서사가 타자의 언어적 틀 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 제목 <Your Ma’s Name Was Chosun Whore>에서 주체는 더 이상 스스로를 지칭하지 않고, 누군가의 ‘어머니’로서만 불린다. 독일어 번역본 Meine Mutter war eine “Korea-Nutte” 역시 자식의 입을 통해 재현된 어머니의 모습으로 위치 지워진다. 일본어 번역본은 다소 중립적인 ‘어머니’라는 호칭을 택했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여성 화자의 자기 발화를 일반화된 범주 안으로 흡수해 버린다.

결국 이러한 제목의 번역 양상은 소설 속에서 자기 삶을 자기 입으로 서술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타자로부터의 호명으로 치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호칭의 차이가 아니라, 목소리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원제 속 ‘에미’는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리, 곧 자기서사의 가능성을 암시하지만, 번역된 제목들은 여성의 목소리를 타인의 시선 속에서 다시 포획한다. 이는 굳이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스피박의 이론을 직접 끌어오지 않더라도, 피해 여성의 발화가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다시 타자의 말로 전유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3. 『에미이름은 조센삐였다』가 분석되어 온 양상

『에미이름은 조센삐였다』는 일본군‘위안부’ 문학 논의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연구되어 온 작품이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민족문제로 받아들여 남성중심적 민족주의를 반복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연구 경향이 중심을 이룬다. 배하은은 『에미이름은 조센삐였다』가 민족-남성 주체 수립의 기획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민족 내부의 차이, 젠더의 차이가 무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⁷⁾ 윤영실 또한 이 작품이 가부장적이고 민족주의적 시각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 본다.²⁸⁾ 같은 맥락에서 김소륵도 『에미이름은 조센삐였다』를 어머니의 고백이 아들에게 부계확인 시켜주는 서사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순결 이데올로기 비판적 고찰을 야기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²⁹⁾ 나아가 노지승은 윤정모의 1980년대 소설을 다시 읽으며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재현이 민족주의적 입장의 여성혐오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지은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본격화 되기 전 『에미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집필 맥락과 개작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한편, 작품이 기대고 있는 문헌이 일본군 병사의

27) 배하은, 「후기 식민주의 민족-남성 주체 수립의 기획 속 ‘위안부’ 재현 연구(1)」, 『민족문화사연구』 no.75, 2021.

28) 윤영실, 「동아시아의 ‘장소들’과 한국근대문학의 탈영토화」, 『현대소설연구』 no.67, 2017.

29) 김소륵,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일본군‘위안부’ 서사 연구」, 『국제어문』 no.77, 2018.

시선이 투영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³⁰⁾ 나아가 이 작품에 드러나고 있지만 주요 인물 분석에 치중되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온 민족 안팎의 비가시화된 여성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혜령은 민족주의를 ‘피해자’의등장이 가능하게 한 장치로서 파악하고 피해자의 커밍아웃은 부계혈통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것,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민족 집단이 겪은 피해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커밍아웃이 가능하게 했음을 지적한다.³¹⁾

진순희는 강요된 침묵에 저항하는 양태로서 『에미이름은 조센삐였다』속 모자 관계와 소통 방식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³²⁾ 신승희는 소설 속 등장인물의 성격적 결함과 피해의식에 대해³³⁾, 이숙은 일본군‘위안부’소설들 속에서 ‘강’과 ‘영혼’이라는 표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논한다.³⁴⁾

4. 좋은 재현과 나쁜 재현을 넘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조센삐’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1982년부터 결과가 나타난다. 주로 소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와 영화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와 관련된 기사들이다. 원래 일본 군인들이 위안소 여성들을 비하하며 사용했던 ‘조센삐’라는 용어가 소설의 제목으로 전면화되고, 영화의 제목으로까지 재현되면서 한국 사회에 등장하고 유통되었다. 이 과정은 언어적 재현을 넘어, ‘조센삐’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폭력적 상황, 섹슈얼리티, 모욕감, 수치심, 민족주의적 분노와 같은 정동을 사회적 장으로 불러들이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동은 통제되지 않는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읽고 민족주의적 환기를 받아 민족주의자가 될지, 피해자가 불쌍하다고 동정하는데 그칠 것인지, 이 책이 발간되고 나서 한참 뒤에 등장하게 될 김학순의 증언에 연대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결국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존재는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다양한 정동적 층위를 형성하며 일본군‘위안부’라는 존재에 대한 집단 기억을 구성하는 한 지점이 되고 있다.

뉴스 라이브러리 1992년 『동아일보』독자의 편지란에 당시 서울시의원이자 가수였던 이선희의 편지가 실려 있다.

30) 이지은, 앞의 논문.

31) 이혜령, 「그녀와 소녀들: 일본군‘위안부’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 『반교어문연구』 no.47, 2017.

32) 진순희, 「강요된 침묵에 저항하는 양태」, 『국제한인문학연구』 Vol.- No.3, 2006.

33) 신승희, 「태평양전쟁과 학병 배광수의 삶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에 대한 또 다른 관점」,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8 No.-, 2019.

34) 이숙, 「일본군 ‘위안부’소설에서의 ‘강’과 ‘영혼’의 서사적 의미」, 『비평문학』 Vol.- No.79, 2021.

얼마 전 <조센삐>라는 나의 노래 제목이 '종군위안부와 우리 국민을 모독했다'는 논리로 고발된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가슴 답답함을 느꼈다.

내가 '종군위안부'에 관해 알게 된 것은 88년 서울올림픽이 한창일 때였다. 신문 한 귀퉁이에 배봉기 할머니의 짙은 증언이 실려 있는 것을 본 것이 그 계기인데 그 후로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라는 책을 읽고 나서 '조센삐'라 불리며 수난의 역사를 살다 간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적지 않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한 개인의 치욕관 불행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악랄하고 또 조직적인 일제의 만행이었다.

(중략)

내가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의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 더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 '종군위안부'의 내용을 다룬 김지하씨의 글에 김영동씨의 곡을 붙여 노래를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나를 고발한 측이 '조센삐'라는 단어에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 역시 '종군위안부'나 '정신대'라는 표현에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종군위안부'나 '정신대'라는 표현이 일제가 자신들의 만행을 합리화하고 미화시키기 위해 만든 단어이기 때문이다.

대답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끌려가 '강간'당한 사람들인 것이다. '종군위안부'나 '정신대'라는 표현은 일본 군부가 강요했던 표현이다. 반대로 '조센삐'라는 표현은 동물이하로 대접 받아야했던 그때의 참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일제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미화시킨 '선전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으나, 아니면 당시의 참상 그대로를 대변하고 있는 '조센삐'라는 표현을 한 나의 노래제목인 <어느 할머니(조센삐)의 극락>이 잘못된가를 나는 묻고 싶다.³⁵⁾

이선희를 고발한 사람은 정동흡이라는 전 광복군 출신으로 독립유공자들과 함께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그는 "조센은 일본말로 조선이며, 삐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중국말인데, 지성인인 서울시의원이 공공연히 취입, 시판한 것은 상식과 도덕성을 버리고 돈만 벌겠다는 행위로 역사 앞에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야 마땅하다"³⁶⁾고 주장했다고 한다.

1982년부터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는 제목으로 출판되고 공개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던 '조센삐'라는 표현은 1990년대 대중가요 영역에서 여러 층위에서 해석되어 충

35) 이선희, 「노래 제목 <조센삐>는 아픈 과거 알리려 쓴 말」, 『동아일보』, 1992. 10. 24.

36) 「'조센삐'는 민족 모욕/ 가수 이선희씨 고발」, 『중앙일보』, 1992. 10. 15.

돌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억하고 전달하려는 의도와 이를 민족적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쪽이 충돌하는 장이 펼쳐졌다.

【토론문】

[토론문] 이아리 선생님 발표
“실상의 규명인가, 책임의 입증인가
: 일본군 ‘위안부’ 역사 연구의 두 방향”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연구가 199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음을 생각하면, 관련 연구 기간은 35년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결코 연구량이 적지 않아, 그 안에서 갈피 잡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아리 선생님이 이 용감한 작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리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 시간은, 그간의 고통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고통의 시간으로 진입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아리 선생님의 수고를 응원하며,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국’의 ‘역사 연구’를 검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그리고 발표자의 작업이 ‘한국 역사학계’의 논의 및 성과와 어떻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의 역사학 관련 공론장에서 이 주제가 주요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한국 여성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달리, 한국의 전문적인 여성사학자들이 대부분 비주류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사 연구가 태생부터 지닌, 현재 개입 및 미래 전망과 조응하는 정치성, 실천성이 모호하다는 한계와도 깊이 관련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발표자는 일본군‘위안부’ 역사 연구의 이중 과제를, ①역사적 실상 규명과 ②일본 정부 및 일본군의 책임 입증 측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위안부’의 실증은 끝났다, 이젠 ‘초국적 방법의 기념’을 고민해야 한다」(이현미, 『경향신문』 2020.2.5.)는 선언도 있습니다. 또한 역사 연구보다 훨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담론 연구, 대중 재현 연구 등에서는 ‘실상 규명’과 ‘책임 입증’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연구’의 ‘피해 입증’이라는 작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시나요.

- 발표자는 ‘책임 입증’ 문제는 법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에서 진행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양자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 법적 투쟁의 판결 근거가 역사적 논거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결국 ‘역사 연구’의 작업으로 쌓아놓은 ‘역사적 실상’ 가운데, 법적 근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취사 선택되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무법이나 비법, 불법적인 측면들을 아울러 검토해도 법정에서는 불법을 드러내는 자료들에 아무래도 초점을 맞추기 마련이니까요. 법정에서 이런 방식으로만 역사 연구가 활용되면, 역사학자가 연구에 들이는 시간과 노고에 비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언어가 양상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생각하더라도요.
- 그렇다면, 역사학자의 작업이 개인의 일상, 우리 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의 윤리와 책임을 일깨우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문의 발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역사 연구의 성과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한국의 ‘위안부’ 역사연구가 사회로부터 “피해 당사국으로서의 높은 도덕적, 민족주의적 당위성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울컥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특수성이 그간의 한국의 역사 연구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선생님께서 좀 비판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연구가 “역사 연구로서의 본업”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연구 사례가 있었습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연구, 그러니까 피해 입증을 넘어 재발 방지와 국가 간, 개인 간 민주적인 관계 설정에 닿는 역사 연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또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역사 연구를 상정하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역사학자로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위안부 관련 역사 연구’를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포스트 메모리 세대로서 고민하시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생님의 연구 분류가 꽤 흥미로웠는데요. ‘한국의 역사 연구’로서 각각의 특징점, 한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요. 발표 중 시간 관계상 말씀 못 하신 부분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토론문】

“일본군‘위안부’연구의 계보학 : 사회학의 지평”에 관한 토론

추주희(전북대학교)

이번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35년을 사회학의 시선에서 계보학적으로 정리하며, 연구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학문적 흐름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 피해자 증언, 운동과 기억, 그리고 역사 부인의 정치까지 주요 쟁점을 함께 되짚었다는 점에서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 사회는 극우적 역사 수정주의와 여성혐오 담론이 확산되는 도전적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연구사를 되돌아보는 작업은 과거를 단순히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회적 투쟁과 연결되는 살아 있는 기억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이번 학술대회의 기획 취지인 세대 간 회고와 학제 간 연대를 통해 기억투쟁을 이어가자는 제안과도 깊이 호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서 이 논문에 대해 토론 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가 학술대회 발표를 넘어 앞으로 더 심화·발전된 연구논문으로 정식 출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보완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연구분석 대상의 범위와 한계

1) 연구범위의 모호성

이 논문은 ‘사회학’이라는 범위를 한정했지만, 실제로는 사회학과 여성학/젠더학의 경계 연구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성을 위해” 제한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분석 범위가 모호해지고, 결과적으로 사회학 고유의 성과와 학제적 교차 성과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사회학의 독자적 궤적을 드러내고자 했던 기획 의도와 실제 결과 사이에 간극이 발생합니다. 이는 오히려 사회학의 자율적 지평을 분석하기보다 애초부터 학제적 교차의 장을 보여주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다시금 굳이 ‘사회학’으로 제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동시에 '사회학적 자원이나 관점'을 제목이나 논지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사회학으로 간주한다면, 이 역시 확장된 범주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연구자께서 제시한 범위의 제한이 학제적 공명과 사회학의 고유 성과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회학의 독자적 지평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제별 분류(제도·정책/개념·성격, 증언·피해자·트라우마, 운동, 역사부인, 사회적 기억, 문화적 재현, 해외연구)에 더해, 이중 분류체계-즉, 세로축에 주제, 가로축에 연구 성격(① 사회학 내부, ② 학제 경계)-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군위안부의 문화적 재현은 사회학 내부에서는 소수지만 학제 경계에서는 활발한 양상을, '사회적 기억'은 반대로 사회학 내부의 분석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양적 분류의 강점과 한계

이 논문은 60편의 학술논문·학위논문을 기반으로 주제별 동향을 집계하고, 연구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표본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빈도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특히 운동의 성격이나 기억과 부인의 정치와 같이 층위가 복잡하게 얽힌 주제에서는 연구의 심층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양적 집계에 더해, 개별 연구가 어떤 분석틀을 사용했는지, 어떤 자료를 활용했는지, 논증을 어떻게 전개했는지를 질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학적 해석의 고유한 심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단순히 “몇 편이 있다/없다”는 수량적 논의에서 벗어나, 실제 쟁점의 차별성과 축적된 성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현실적 가능성입니다. 질적 검토에 있어 60편이라는 수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모든 논문을 질적으로 깊이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수 검토가 아니더라도, 주제별 핵심 쟁점군을 선정해 대표 연구를 심층 분석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증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방식과 윤리적 접근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운동 연구에서는 사회운동론적 해석틀과 국제연대 담론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역사부인 연구에서는 정치 사회학적 분석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비교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질적 검토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단순 동향 분석을 넘어서는 풍부한 성과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쟁점과 성과에 관한 논의

먼저, 이 논문이 첫 번째 쟁점으로 제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운동의 성격” 부분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학문적 논의와 국제 정세, 그리고 이후의 성과들이 일괄적으로 병치되어 서술되어 있습니다. 강선미·야마시타(1993)와 안진(1993)의 논쟁을 시작으로, 민족주의와 여성주의의 긴장, 그리고 이를 매개로 발전한 저항적 민족주의 개념까지 중요한 학문적 쟁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인권규범의 발전이나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성과, 양현아의 새로운 개념 제안과 같은 이론적 성과까지 동일한 층위에서 기술되어 있어, 독자가 “무엇이 논쟁적 쟁점이고, 무엇이 그에 대한 성과인지”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쟁점과 성과를 구분하는 논리적 전개 방식이 좀 더 선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쟁점은 여성 문제와 민족문제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 강제성의 인정 여부, 운동을 둘러싼 이론적 패러다임의 차이와 같은 대립적·논쟁적 국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과는 그 논쟁 속에서 정진성의 저항적 민족주의 개념, 양현아의 식민지성에 기초한 젠더폭력 개념과 같이 논쟁을 매개로 새롭게 도출된 개념적·이론적 진전을 지칭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자 사회 내부의 이론적 긴장과 외부 정치적 맥락이 교차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더 입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저자가 지적하듯이, 새로운 자료 발굴이나 국제인권규범의 발전, 외교정책 변화는 모두 “외부 계기”입니다. 이를 통해 촉발된 내부 논쟁(쟁점)을 먼저 제시하고, 그 결과로서 새로운 개념화·재개념화(성과)가 어떠한 차별성을 만들어냈는지를 구분해 정리하면, 연구의 내적 동학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1990년대 이후 증언 채록의 방법론적 전환과 피해자 연구의 확장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특히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시리즈의 출간 과정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방법론적 논쟁, 증언 형식의 변화, 그리고 이후 포스트식민주의 인식론과 구술생애사 방법론으로의 전환을 촘촘하게 서술한 것은 이 분야 연구의 지형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절 역시 어떤 점이 쟁점이었고, 그 결과로 어떤 성과가 도출되었는가의 구분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증언이 사건사적 기록에서 다층적 의미의 드러내는 것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방법론적 논쟁(증언을 1인칭으로 가공할 것인가, 있는 그대로 기록할 것인가), 윤리적 쟁점(피해자의 침묵과 말하기를 둘러싼 조건, 연구자와 ‘공감적 청중’의 관계)는 쟁점의 성격을 갖습니다. 현재 서술은 이 두 층위를 구분하지 않고, 긴 목록처럼 성과와 논쟁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원고가 초안으로 작성중임을 감안하여 비교적 짧게, 나열식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고려할지라도, 증언 연구는 방법론적·윤리적 논쟁과 학문적 성과가 긴밀하게 얹혀 있기에, 층위를 구분하지 않으면 단순히 연구자 이름과 논문이 목록

처럼 나열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쟁점처럼 쟁점에서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로 재배치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주요한 쟁점이 증언의 가공과 ‘있는 그대로’ 사이의 논쟁, 증언을 둘러싼 윤리적·방법론적 문제, 피해자의 침묵과 말하기의 조건, 증언이 민족주의 담론에 포섭되는 위험성이라면, 성과는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시리즈의 발전, 포스트식민주의 인식론과 구술생애사 방법론의 정착, 피해자 증언 연구의 존재론적 확장(공감적 청중·되기/함께-존재하기의 관점), 이행기 정의 연구와의 접속으로 보여집니다.³⁷⁾ 또한 증언 연구가 학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피해자 지원 제도, 국제 규범, 운동의 실천과 긴밀히 얽혀 있다는 점은 이 분야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쟁점을 정리할 때에도 “학문적 방법론의 논쟁”과 “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의 쟁점”을 구분해 서술하면 사회학적 성과의 층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쟁점인 ‘기억과 부인의 정치’ 부분은 2015년 한일 합의를 기점으로 사회적 기억 연구와 부인 연구가 본격화된 흐름을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문 서술은 비교적 간략하여, 사례 나열과 맥락 정리에 그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각주에는 박유하/램지어 논란의 구체적 차이, 부인의 기법과 효과, 제도적 부인 개념 등 훨씬 중요한 논점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 절은 짧지만, 실제로는 연구자가 이미 핵심 쟁점을 포착해 두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이 이 내용을 보다 전면적으로 드러낸다면, 쟁점-성과의 구도가 훨씬 명확해질 것입니다. 현재 기술된 맥락에서 쟁점은 일본 내 극우 및 아카데미 부인론의 부상, 2015년 합의와 탈진실 정치가 만들어낸 새로운 국면, 기림비·평화비 운동에 대한 반동적 공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과는 부인의 사회학을 도입해 아카데미/제도적 부인 개념을 정교화한 연구들의 등장, 2019년 램지어 사태에 대한 학계의 집단적 비판과 반박, 기억 운동과 부인 담론을 연결해 사회학·역사학·법학·여성학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의제를 구축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인의 정치’라는 쟁점에 대해 사회학이 어떤 방식으로 이론적·분석적 성과를 축적해왔는지를 드러내는 데 더 큰 비중을 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의 주제가 피해자의 목소리와 운동의 실천에 기반한 기억 투쟁의 정치성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단순히 일본 내 역사부정을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 오늘 한국 사회에서 기억 연구가 갖는 의의(여성혐오, 극우 담론, 탈진실 정치의 확산 속 위치)를 더 부각시킨다면, 이 논문의 사회학적 기여는 한층 더 선명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연구 35년의 궤적을 사회학의 시선에서 계보학적으로 조망하며, 개별 연구의 성과를 넘어 전체 흐름과 맥락을 복원하는 귀중한 시도입니다. 연구 대상을 학술논문·학위논문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사회학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드러

37)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3권에서 증언 가공 논란은 분명 방법론적 쟁점인데, 본문에서는 이를 성과와 함께 나열해 독자가 긴장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긴장은 이 논문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제 간 교차와 공명을 드러내는 성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학문사 정리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민주주의 후퇴와 역사부정의 시대에 연구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환기합니다. 저는 이 논문이 학술대회 발표를 넘어,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연구 지형을 재정리하는 기초 연구이자 더 심화된 연구로 발전할 토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토론문】

좋은 재현을 넘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학, 정동,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장소정(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장수희의 “재현-비재현 너머: 일본군‘위안부’ 문학을 중심으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관련된 문학 연구가 오랫동안 ‘재현’의 옳고 그름을 나누는 이분법에 갇혀있었지만, 실상 현장에서는 정동이 쉽 없이 사람들 사이를 타고 흐르며 다양한 사회적 입장과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상이한 지식을 가진 관람객과 마주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로서는 매우 반가운 글이었다. 일본군 성노예제를 둘러싼 정동은 기존의 연구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종다양한 호흡이 있고, 시시각각 변하는 냄새와 모양을 가지고 있다. ‘현장을 포착하는 연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재현 도식의 한계를 짚어내며 피해자의 주체성과 발화 문제, 아카이브와 기억의 구성 방식에 대한 대안 틀을 제시했다.

글은 ▲일본군 성노예제를 받아들이는 대중의 인식과 그것을 감각한 연구자의 경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룬 문학작품의 목록과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의 번역 과정 및 한계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분석했던 연구의 계보 ▲좋은 재현과 나쁜 재현을 가르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비판과 복잡한 정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원제의 ‘에미’는 스스로가 자신을 부르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는 국제적 담론 속에서 어떻게 재전유되고 있는가. 여성 주체의 자기 발화인 ‘에미’가 번역 과정에서 ‘너의/나의 어머니’로 치환되며 타자의 시선으로 재편된다. 동시에 이 작품이 영화로 확장되면서 ‘나쁜 재현’으로만 평가되는데, 민족주의적/가부장적 재현이라는 분석이 대거 등장한다. 이분법적 연구의 축적은 무엇을 재현할 것인지 목적어를 고민하는 대신, 좋은 재현에 대한 압박과 강박으로 치환됐다. 특히 ‘조센삐’라는 단어는 모욕감, 분노, 연민, 연대가 뒤엉켜서 과연 모욕의 언어인지 현실을 드러내는 언어인지 혼란을 만들어내며 계속 ‘충돌’한다. 사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충돌’이 아닌가.

이 지점에서 과연 현장에서는 무엇과 ‘충돌’하고 있는가 고민이 들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는 관람객과 자주 ‘충돌’하는 지점은 놀랍게도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재현이나 베트남 전쟁에 대한 특별전시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발

생하는 분쟁 지역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전시다. 관람객의 70% 이상이 외국인이고 각자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차하는 정동이 포착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자주 듣는 피드백 중 하나는 왜 분쟁지역에 팔레스타인만 다루고 이스라엘은 다루지 않냐는 것, 이 공간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 공통적인 여성 폭력의 문제점을 직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론 비난의 방식으로 꽃히는 말들에 일일이 대응하기 위해 전시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감각, 정동이 교차할 수 있는 장(場)을 열고 들여다보고 있다. 운동은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혀 다른 이들이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내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장수희의 글은 문학이 어떤 장(場)을 열고 있었는지, 기억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동시에 소거하고 있는지, 작품이 가진 정치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되묻는다. 장수희의 지적처럼 '좋은/나쁜 재현'을 나누는 도식은 작품을 협소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장(場)은 어떻게 열릴 수 있는가. 비평에 대한 새로운 접근 틀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조센삐에 대한 검색 결과를 요약한 4절은 가능성의 틈을 열어준다. 장수희는 1982년부터 등장하는 조센삐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 등장하고 유통되었는지 짚었다. 작품이 생산된 배경, 당시의 운동 상황, 재/전유하는 다양한 접근, 받아들이는 독자 등 작품 자체의 재현과 누락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다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준 셈이다.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작품을 둘러싼 역사를 충실히 담고 있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더 많은 작품을 더 다채롭게 분석하는 연구가 많아진다면 우리는 어떤 연구 지형을 마주하게 될까.

이 지면을 빌려 연구자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다. (이 때 아니면 조무래기 신진 연구자는 말할 곳이 없다!) 활동가이자 신진 연구자로서, 연구자들이 조금 더 부지런해지면 좋겠다. 한계가 있다면 명확히 짚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침묵이나 누락을 고민한다면 증언집에 대한 치밀한 말 걸기를 시도하길 바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을 다루고 싶다면 운동의 현장에 대한 부지런한 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에서 레퍼런스가 중요하듯, 운동에 대한 글은 디테일과 추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상 속에 존재하는 파편화된 운동의 장면에 국한되어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운동이 제자리일 것이라는 오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운동은 매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문학 작품을 받아들이고 향유하는 독자 역시 매일 새로운 감각을 느낀다. 복잡하게 교차하는 식민주의, 제국주의, 파시즘, 페미니즘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일본군'위안부'연구 중에서도 문학 연구의 궤적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장수희의 글에서 부산에서 진행된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의 장면은 우연히 배치된 것이 아니다. 문학 연구의 궤적을 짚는 글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것 자체가 운동과 연구가 복잡하게 얹혀있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의 양상을 대변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통해 전시 성폭력과 여성 폭력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온몸으로 감각하는 관람객들을 만나면서 분석 틀의 편협함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이제는 '완벽한 재현'을 찾는 이분법적 비평에서 벗어나, 문학작품이 생산하는 다층적인 기억과 정동, 번역과 수용의 과정에 내재한 권력관계에 주목해야 할 때가 아닐까. 앞으로 남은 후속 연구가 너무나 많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연루된 자로서 '쓸 책임'을 다하는 것은 후속 세대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의 학자들, 활동가들, 그리고 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책임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루며 어떤 공간을 펼쳐갈 것인가.